2023 Joint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iddle Eastern Studies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2023 한국중동학회–한국아프리카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

세계 질서 다극화와 중동·아프리카의 협력과 도전

Adapting to a Multipolar World Order: Collaborative Endeavors and Challenges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2023. 10. 28 토요일 |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701호 한상은 라운지

28th October Saturday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entennial Hall, Han Sang–eun Lounge–Room 701

주 최 한국중동학회 Korean Association of Middle Eastern Studies KAAS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후 원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MBASSY OF THE UNITED ARAB EMIRATES SEOUL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Sookmyung Institute of Global Governance GCC국가연구소

2023 한국중동학회-한국아프리카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

〈 세계 질서 다극화와 중동·아프리카의 협력과 도전 〉

- ❑ 일시 : 10월 28일 토요일
  Date : The 28th October (Saturday) 2023
- ❑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701호 한상은 라운지
  Venu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entennial Hall, Han Sang-eun Lounge - Room 701
- ❑ 주최 : 한국중동학회, 한국아프리카학회
  Hosts: Korean Association of Middle Eastern Studies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 ❑ 후원 : 외교부, 주한 UAE 대사관,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Sponso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UAE Embassy to Seoul, Sookmyung Institute of Global Governance, The GCC Institute of Dankook University

Program

09:00~09:30	**등 록 Registration**
09:30~09:35	**축하 연주 Celebrating Performance**

-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 국가 연주
  National Anthem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채희철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
  Hee Chul Chae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09:35~10:05	**개회식 Opening Ceremony**

[사회 Moderator]
박정경 (한국외국어대학교)
Jeong_Kyung Par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개회사 Opening Remarks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아프리카학회 회장)
  Dong-Ju Choi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 환영사 Welcoming Remarks
  홍미정 (단국대학교, 한국중동학회 회장)
  Mijung Hong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Middle East Studies)
-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김은정 (외교부, 아중동국장)
  Eunjeong Kim (Director-General for African and Middle Easter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E. Abdulla Saif Al Nuaimi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H.E. Abdulla Saif Al Nuaimi (Ambassador of UAE to Seoul)

10:05~10:15	**휴식 및 단체사진 Group Photo/ Coffee Break**

10:15~11:50	**1세션. 세계 질서 다극화와 중동·아프리카** **Session 1. Navigating a Multipolar World Order in the Middle East & Africa**

[좌장 Chair]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Dong-Ju Choi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 중동 다극화와 중추국의 부상
  Multipolarity of the Middle East and the Pivot States
  김은비 (국방대학교)
  Eunbee Kim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Korea)
- 국제 질서의 변화와 이란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Iran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Joo Han Lee (HUFS, Korea)
- 미중갈등에 따른 중동의 신세력 균형
  New Balance of Power in US-China Competition
  서상현 (포스코)
  Sanghyun Seo (POSCO, Korea)
- State Capacity and Asylum Policy Liberaliz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김은경 & 한성민 (한국외국어대학교)
  Eunkyung Kim & Sungmin Han (HUFS, Korea)

11:50~12:50	점심 **Lunch**
12:50~14:30	**2세션. 중동과 아프리카 협력 메커니즘의 과거, 현재와 미래** **Session 2.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ooperation Mechanisms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좌장 Chair]
주동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Dong-Joo JOO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GCC국가와 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
  GCC Oil Exporters and Petrodollar Recycling
  송상현 (단국대학교)
  Sang Hyun Song (The GCC Institute, Dankook University, Korea)

- 에너지전환 시대 화석연료 활용 논의와 중동의 과제
  Use of Fossil Fuels in the Era of Energy Transition and Challenges facing the Middle East
  유광호 (KIEP)
  Kwang-Ho Ryou (KIEP, Korea)

- 중동 아프리카 에너지 보조금 정책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on energy subsidies in the MENA region
  강문수 (KIEP)
  Munsu Kang (KIEP, Korea)

- 모로코 농촌 개발협력 모델로서 아르간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가치창출
  Argan GIAHS conservation and value creation as a model for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Morocco
  김덕수 (전북대학교)
  KIM Deok S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UAE and the Regional Strategic Transformation
  John Harrison (Rabdan Academy)

14:30~14:40	**휴식 Coffee Break**
14:40~16:10	**3세션. 중동과 아프리카의 신흥안보** **Session 3. Addressing Emerging Security Challenges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좌장 Chair]
김수원 (한국외국어대학교)
Kim Suwe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아랍의 봄 이후의 중동발 이주와 수용국의 정치 안정성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post-Arab Spring Migration to Political Stability of the Host Country
  백승훈 & 노다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Seunghoon Paik & Dasol Roh (IMES, HUFS, Korea)

- 레바논 국가 안보 위협으로서의 시리아 난민
  Syrian Refugees as a National Security Threat to Lebanon
  이경수 & 안소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Kyungsoo Lee & Soyeon Ahn (IMES, HUFS, Korea)

	▪ 정책통합이론으로 분석한 서아프리카 기후변화대응 West African Response to Climate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Integration 김유원 (한국외국어대학교) Yoowon Kim (HUFS, Korea) ▪ Strong states, stronger societies. Middle East cases and the refugee crisis Marwa Mohamed (Rabdan Academy)
16:10~16:20	**휴식 Coffee Break**
16:20~17:35	**4세션. (주한 UAE 대사관 특별 세션)** **Special Session. Enhancing Cooperation Between the Middle East and East Asia Toward Multipolar World Order**
	[Chair] Alanoud Al Hosani (TRENDS Research and Advisory) ▪ U.S.- China Tensions and Its Impact on Cooperation Between the Middle East and East Asia Mohamed Binhuwaidin (UAE University) ▪ Regional Organizations and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the Middle East and East Asia Abdelrahman Ahmed (Sharjah University) ▪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Middle East and East Asia in Trade, Investment, Energy, and Security Mouza Al Marzouqi (TRENDS Research and Advisory)
17:35~17:50	[사회 Moderator] 박정경 (한국외국어대학교) Jeong_Kyung Par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폐회사 Closing Remarks 홍미정 (단국대학교, 한국중동학회 회장) Mijung Hong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Middle East Studies)
17:50~20:00	저녁 식사 Dinner

Contents

3세션. 중동과 아프리카의 신흥안보

Session 3. Addressing Emerging Security Challenges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4세션. (주한 UAE 대사관 특별 세션)

Special Session. Enhancing Cooperation Between the Middle East and East Asia Toward Multipolar World Order

1세션. 세계 질서 다극화와 중동·아프리카
Session 1. Navigating a Multipolar World Order in the Middle East & Af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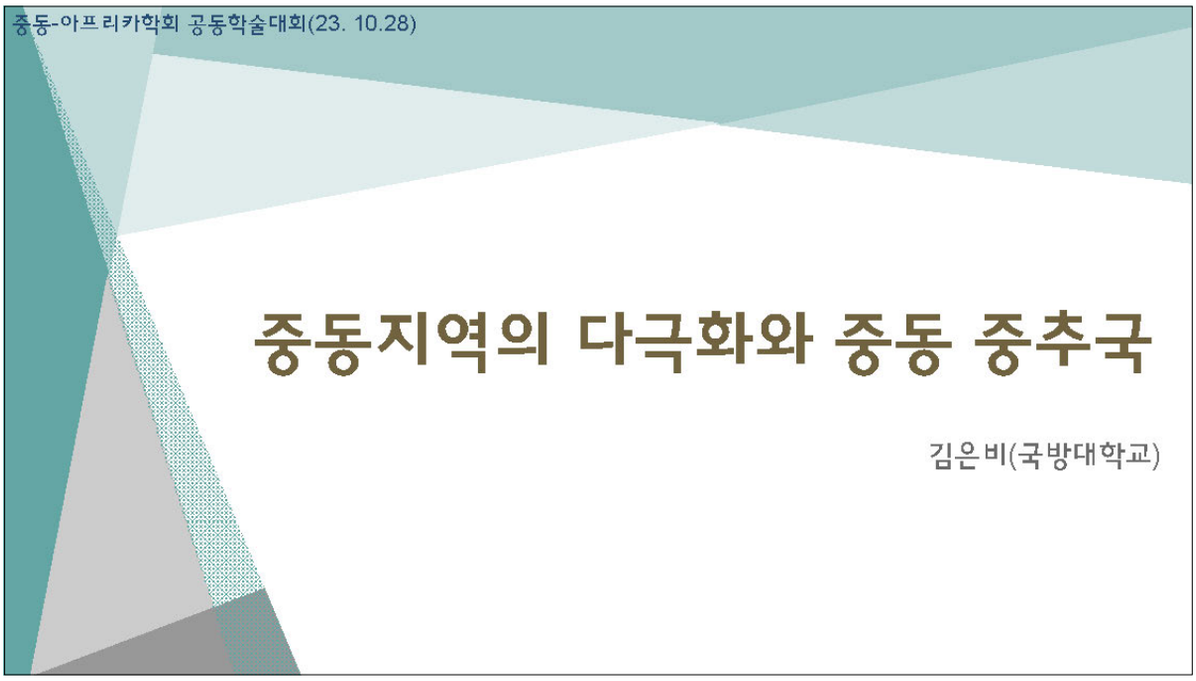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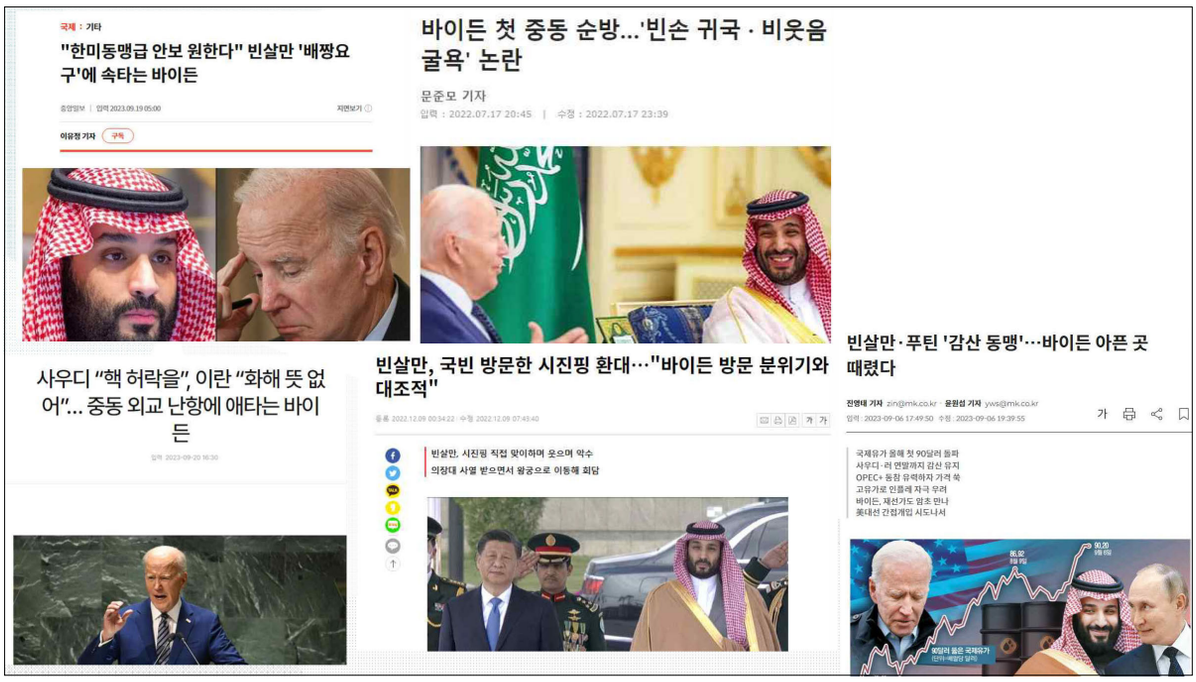
[좌장 Chair]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Dong-Ju Choi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 중동 다극화와 중추국의 부상
  Multipolarity of the Middle East and the Pivot States
  김은비 (국방대학교)
  Eunbee Kim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Korea)
- 국제 질서의 변화와 이란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Iran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Joo Han Lee (HUFS, Korea)
- 미중갈등에 따른 중동의 신세력 균형
  New Balance of Power in US-China Competition
  서상현 (포스코)
  Sanghyun Seo (POSCO, Korea)
- State Capacity and Asylum Policy Liberaliz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김은경 & 한성민 (한국외국어대학교)
  Eunkyung Kim & Sungmin Han (HUFS, Korea)

중동 다극화와 중추국의 부상

김은비 (국방대학교)





중동 정세의 변화 : 다극화

▶ 중동에서 미국 중심 일극체제는 유효한가 (Yes or No?)

- 다극체제
- 약해진 일극체제 유지

▶ 변화의 원인

- 외적 요인: 미국의 대중동정책 변화와 중·러의 접근
  - 미국의 Pivot to Asia,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중동 내 미국의 영향력 약화
  - 중국, 러시아의 중동내 영향력 확대
- 내적 요인: 중동 각국의 역량 확대
  - 새로운 국가지도자의 출현
  - Hard + Soft power 향상

미국의 대중동정책 변화: 동맹 신뢰성 약화

▶ 부시: 직접 개입 전략(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테러와의 전쟁)

▶ 오바마: 역외 균형자

-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견제 필요: 인도태평양 전략(Pivot to Asia)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철수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중동문제 선택적 개입

- 중국 견제 강화
- 시리아 내전 철수(쿠르드 민병대 YPG 방기), 동맹비용 지불 강요, 도하협정
- 이란 압박, 이스라엘 지지(아브라함 협정)

▶ 바이든: 동맹중시, 다자/소다자주의 강조

- 중국 견제 강화
- 아프가니스탄 철수

중동 내 힘의 불균형: 미국의 공백과 중·러의 접근

▶ 중국

- 일대일로(BRI): 육상, 해상 영향력 확대
  - 18개 중동국가 참여 중
- 중재국으로서의 역할 확대: 사우디-이란
  -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와 외교"를 적용한 첫 (성공) 사례
- SCO 중동 진출확대: 사우디, 이란
- 군사협력 확대
  - 해군기지 설치: 지부티 외 바레인과 이란, 사우디 등 타진 중
  - 드론 공장건설, 탄도 미사일 연구 지원 등(@사우디)

▶ 러시아

- 중동 내 분쟁 개입(시리아 내전, IS 격퇴전 등)
- 중재국으로서의 역할 확대: 사우디-시리아

다극화와 그 결과

▶ 불안정성 ⇨ 비강대국의 행동 변화

- 세력의 불균형
- 평화상태(no-war) 유지의 불확실

▶ 비강대국의 선택지

- 강대국 편승전략 → 독자적 자율성 추구
- " 다극체제 하에서 하나의 極을 맡을 수 정책과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IISS 에밀 호케이엄)
- 대안의 모색 : nonaligned < (multi)omni-aligned

▶ 중추국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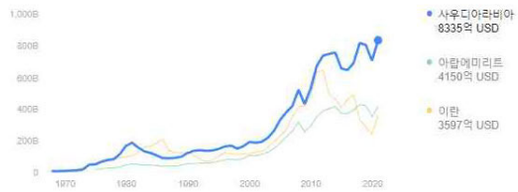
- 향상된 국력 필수
- 영향력 확대 추구 → 국력 강화로 환류

※ 중추국: 강대국의 탐내는 군사적, 경제적, 관념적, 전략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강대국 사이 중첩되는 영역의 한가운데 있으며, 주변국과의 연합의 변동이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 Hard Power

- 경제력: G20, GDP 세계 18위(중동 1위, 2022)
  비전2030
- 군사력: 국방예산 약 460억$ 세계 8위(중동 1위, 2023)
  군사력 중동 5위
-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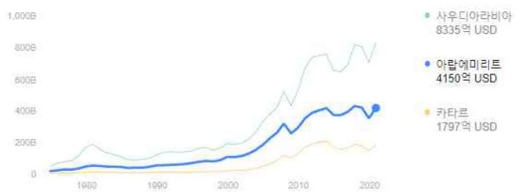
▶ Soft Power

- 이슬람 발상지
- 국가브랜드 파워 22위(2016) → 17위(중동 1위, 2023)
- 소프트파워 19위(중동 2위, 2023)
- 엑스포, 동계올림픽, 월드컵 유치 등
- 친환경에너지 개발 등 의제 선도
- OPEC+, GCC 주도, ODA 확대 등 영향력 확대 중

UAE

▶ Hard Power

- 경제력: GDP 중동 4위, GDP/cap 세계 14위(중동 2위)
  세계 7위 석유 매장 but 사업다각화 노력
  아부다비경제비전 2030, 두바이 2031
- 군사력: 세계 56위(걸프 2위, 2023), GDP 5% 투자



▶ Soft Power

- 소프트파워 세계 10위(중동 1위, 2023),
  국가브랜드 순위 세계 16위(중동 1위)
- 두바이 미디어시티
- 우주개발 등

미국의 전략

▶ 미-중 경쟁 격화 속 NSS(2022. 10.) :

인도 태평양 - 유럽 지역 연계성 중요

- 강력한 국제적 연대(coalition) 구축
  - NATO, 양자동맹, AUKUS, QUAD, Five Eyes
- '포괄적 연대(a inclusive world)' 구축
  - ASEAN, 중동 등 비민주주의 국가 연대도 포함
- '집합적 역량 (collective capacity)' 구축 필수적
  - 양자 동맹, 선도적 파트너 국가, 지역 기구, EU/NATO 등

→ I2U2, IMEC(인도-중동-유럽 경제 회랑)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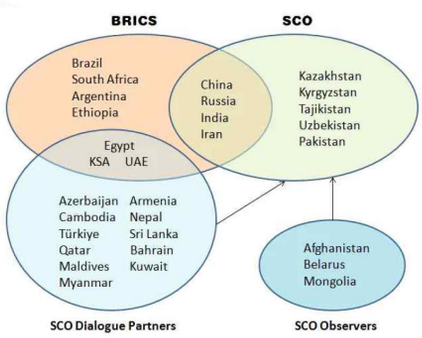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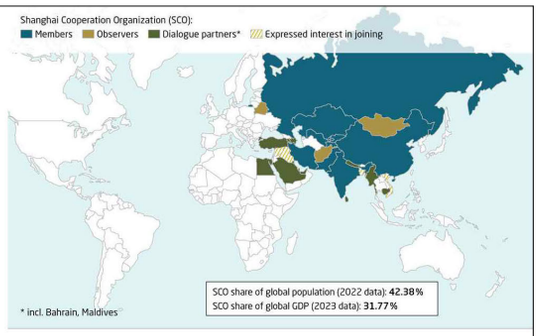
미국에 독자적 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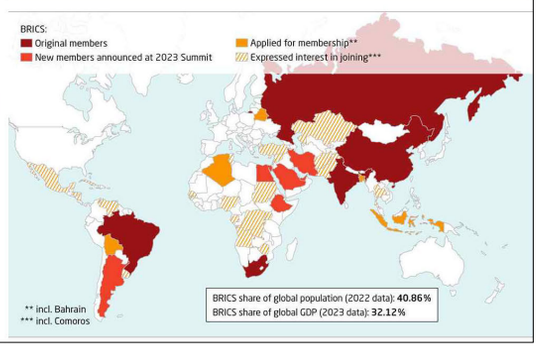
▶ 중국/러시아 주도 연합체 가입

- SCO
- BRICS

▶ 경제, 군사, 외교분야 협력 다각화







다극화된 중동의 미래?

▶ Strength
- 데탕트 분위기
- 탈석유 경제 다각화 노력

▶ Weakness
- 지역의 근본적 문제 상존(팔레스타인 대의 등)
- 미-중 경쟁의 場으로서의 중동
- 역내 국가간의 경쟁 강화로 인한 불안정

▶ Opportunity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역내 국가의 외교적 지렛대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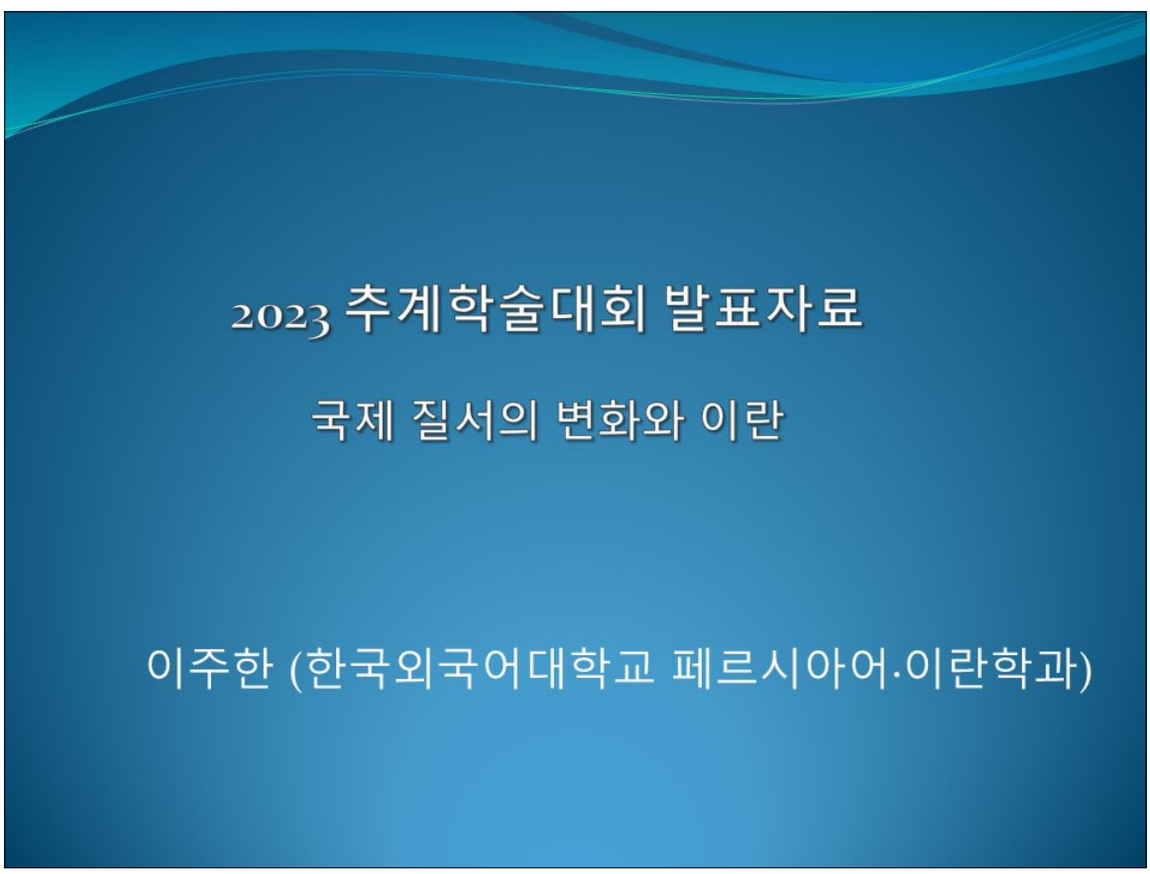
▶ Threat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폭력적 시아 연대의 강화, 대리전
- 美 대선 결과

감사합니다

김은비(srain11@korea.kr)

국제 질서의 변화와 이란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목차

1.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2. 중국의 대(對)중동 영향력 확대
3.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
3.1 이란의 상황
3.2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
3.3 중국의 역할
4. 미국의 대응
5. 한국에 주는 함의

Joo 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

1.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 2015년 7월에 타결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일명 이란 핵합의는 이란과 P5+1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합의로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2018년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하였고,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제한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으로 맞대응하였음.

Joo 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3

1.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56643178

-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은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

1.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 2023년 3월 이란은 IAEA와의 공동성명에서 미신고 장소 3곳의 핵물질 검출과 관련해 IAEA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음.
-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반응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미신고 장소 3곳: 투르쿠자바드(Turquzabad تورقوزآباد), 마리반(Marivan مریوان), 바라민(Varamin ورامین)

2. 중국의 대(對)중동 영향력 확대

- 2023년 2월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음.
- 이미 이란과 중국은 2021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고 향후 25년간 에너지 · 경제 · 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Joo 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6

2. 중국의 대(對)중동 영향력 확대

- 중국은 이란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걸프 아랍 국가들과도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2022년 12월 시진핑 주석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걸프협력회의(GCC) 정상들을 만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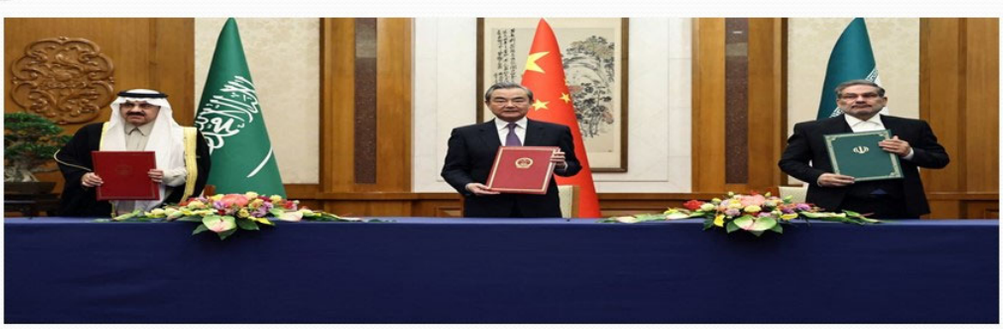
Joo 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7

3.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

-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는 2016년 사우디 정부가 반정부 성향의 시아파 고위 성직자 셰이크 니므르 알-니므르(Sheikh Nimr al-Nimr)의 사형을 집행하면서 악화되었음.
- 이후 이란 시위대가 테헤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을 공격하면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관계는 단절되었음.

Joo 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8

3.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



https://edition.cnn.com/2023/03/11/middleeast/iran-saudi-arabia-normalization-china-analysis-intl/index.html

- 중국 베이징에서 2023년 3월 발표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 합의는 중동 정치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Joo 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9

3.1 이란의 상황

- 2018년 미국이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
- 2022년 9월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이란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란 정부는 더욱 압박감을 느꼈음.
- 이번 시위는 정치적 맥락과 경제적 맥락 그리고 사회적 맥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

Joo 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0

3.1 이란의 상황

- 2021년 6월에 실시한 13대 이란 대선의 특징은 낮은 투표율과 보수 강경파 후보의 승리로 요약할 수 있음.
- 라이시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지지기반이 불안했다고 볼 수 있으며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서 반정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할 수 밖에 없었음.

Joo 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1

3.1 이란의 상황

- 이란의 경제적 상황은 반정부 시위를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는데 이란의 물가상승률은 2021년 40.1%, 2022년 49%를 기록하였음(출처: IMF).
- 여기에 소수민족 차별 등의 사회적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반정부 시위는 이란 전역으로 확산되었음.
- 이란은 경제난을 해소하고 반정부 시위로 고조된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돌파구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개선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음.

Joo 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2

3.2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

-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왔지만 미국의 중동 관여가 줄어들면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음.
-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2019년 9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 시설을 공격한 사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안전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음.

Joo 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3

3.2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

-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른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의존 경제에서 벗어나려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중동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필수적인 상황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역내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음.

Joo 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4

3.3 중국의 역할

- 2023년 7월 이란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9번째 회원국이 되었음.
- 사우디아라비아도 대화 파트너 자격으로 SCO에 참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중동 정세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임.

Joo 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5

4. 미국의 대응

- 2023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Antony Blinken)은 "미국은 중동을 떠나지 않았다" 고 밝혔음.
- 이후 2023년 8월 미국은 이란과 상대국에 수감된 자국민 맞교환 그리고 이란의 해외 동결자금 해제에 합의하였음.
- 이로써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도 동결이 해제되었음.

Joo 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6

4. 미국의 대응

- As it relates to Iranian destabilizing activities in the region – their funding of terrorism, their provision of drones to the Russian Federation, their crackdown on human rights, all of those things – countering them is someth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continue to pursue (Department Press Briefing – August 14, 2023).

Joo 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7

5. 한국에 주는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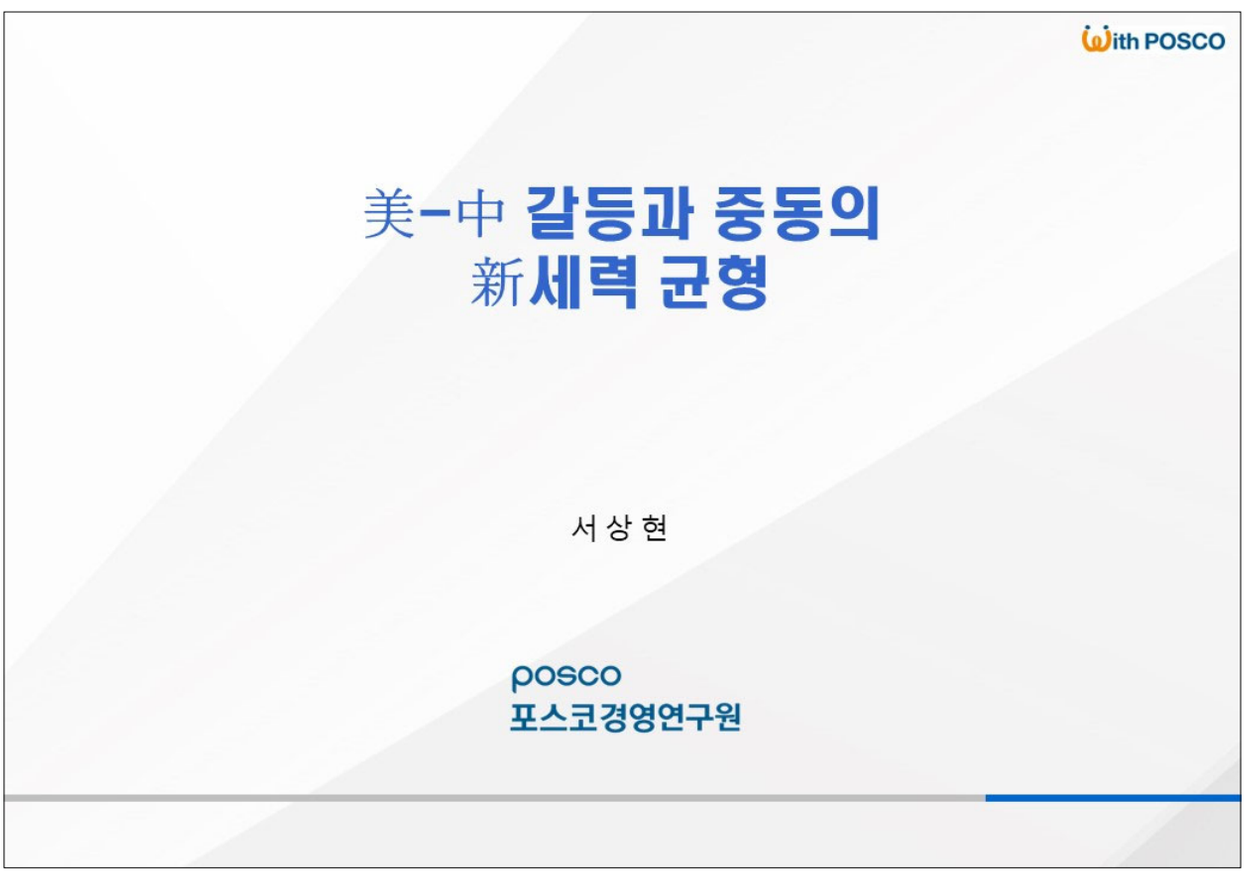
-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에 대한 동결이 해제되면서 한국과 이란 사이의 해묵은 걸림돌이 제거되었음.
- 한국의 대(對)이란 제재 동참으로 악화된 양국 관계를 복원시키는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음.
- 이와 관련하여 문화 교류는 양국 간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Joo 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8

감사합니다

미중갈등에 따른 중동의 신세력 균형

서상현 (포스코)



Ⅰ. Intro

중동에서 美는 영향력 축소, 中은 영향력 확대

미국의 영향력 축소

▪ **美, 中 영향력 억지 위해 중동 전략자산 '아-태 지역'으로 집중**
- **오바마** : 'Pivot to Asia' 집중 위해 이란 핵 협정 체결, 이라크 미군 철수 등 중동에서의 美 영향력 축소
- **트럼프** : 이란 견제 위해 이스라엘과 아랍국 평화협정(아브라함 협정) 체결 지원
- **바이든** : 오바마 정책 계승위해 이란 핵 협상 시도 및 아프간 철수 등 중동에서의 영향력 축소 시도

→ **러-우 전쟁 이후 중동 지정학 중요성 再부상으로 중동 정책 재검토**

▪ **美의 중동 영향력 축소에도 불구 4가지 핵심 이익을 위한 영향력 강화는 여전히 진행 중**
- 과거 우선시 되던 **경제 패권**보다 **군사 안보 및 중국의 중동 영향력 확대 억지**에 중점을 둠

美의 중동 4대 핵심 영역
① 이란의 중동 영향력 억지 및 핵 개발 능력 통제
② 美의 중동 관문인 이스라엘과 관계 강화
③ 다양한 아랍국가들과 안보동맹 및 에너지 안보 유지
④ 세계 최대 무기 판매 시장의 유지

중국의 부상

▪ **中, 중동 최대 교역국이자 에너지 수입국으로 경제 영향 확대**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를 통해 中-중동 경제 밀착
- 中, 중동 에너지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

▪ **중국모델(베이징 컨센서스), 정치·경제 통제 용이로 중동 국가 선호**
- GCC 등 중동 권위주의 국가의 국민 통제 활용
  ①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집권적 통제)
  ② 권위주의적 국가 메커니즘
  ③ 엄격하게 통제된 정치 영역

→ **특히 최근 중국의 5G를 활용한 자국민 감시 능력 선호**

▪ **중국은 미국의 아-태 봉쇄 돌파구 및 에너지 안보 위해 중동에서의 위상 강화 노력 중**

中의 중동 4대 핵심 영역
① 에너지 안보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추구
② 일대일로의 최종 기착지인 유럽의 중간 경유지 역할
③ 美의 아-태 봉쇄 돌파구 및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역할
④ 러와 함께 중동에서의 美 영향력 약화 시도

☞ **중동에서 美-中 경쟁은 에너지 및 군사안보 분야가 핵심**

Ⅱ. 미국의 對중동 정책 ① 군사 안보 협력

에너지 확보 및 지역안보 유지 위해 군사 협력에 중점

중동에서의 군사·에너지 안보 협력

▪ **美, 중국 영향력 억지 위해 군사 안보 협력 집중**
- 美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최근 중동까지 포함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봉쇄 위해 보다 포괄적 범위로 확대
- 美, 쿠웨이트·사우디·오만·UAE·바레인·카타르 등에 군사 기지 유지
  · 2021년 1월 현재 미군은 쿠웨이트에 13,500명, 카타르에 8,000명 등 주둔

→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라크, 바레인, 시리아 등에서 군사력 감축에도 불구 중동 최대 전력 유지**

▪ **에너지 안보 및 이란 견제 위해 걸프만에 美 군사력 집중**
- 카타르, 바레인 해군 기지 운용. 사우디에 패트리어트 방어망 구축
  · 걸프 만은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30% 차지

<걸프(Gulf)만과 호르무즈 해협>

미국과 중동의 주요 군사 협정 현황

▪ **중동 주요 무기의 70% 이상이 미국産**

국가	주요 내용
UAE	▪ '19년 미국과 국방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
카타르	▪ '22년 미국은 카타르를 주요 비 NATO 동맹국으로 지정
사우디	▪ 1950년대부터 사우디와 군사 훈련 협력
쿠웨이트	▪ '91년 국방 협력 협정 체결. '04년 비 NATO 동맹국 지정
바레인	▪ '91년 국방 협력 협정 체결. '02년 비 NATO 동맹국 지정
오만	▪ 오만에 해군 기지 건설

<중동 미군 배치 현황('21)>

Ⅱ. 미국의 對중동 정책

② 중국견제: I2U2(중동판 쿼드)

中의 일대일로 대응 위해 중동판 쿼드 'I2U2' 결성

I2U2 결성

- **美(기독교), 인도(힌두), 이스라엘(유대), UAE(이슬람) 등 정치·문화 相異에도 불구 새로운 연대 형성**
  - '21. 10월 4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논의→ '22.7.14. 정상회담
  - 각국의 영문 이니셜 조합한 I2U2 (Israel, India, UAE, USA)로 불림
  - 향후 사우디, 이집트, 그리스, 프랑스(I2U2+) 등 합류 가능성 높음
  - '20년 체결한 **아브라함 협정**의 확장판
- **궁극적으로 I2U2 Plus 그룹을 '인도-태평양 쿼드'와 연결 하여 포괄적인 중동·아시아 질서 강화 목적**

<I2U2와 4개국 핵심이익>

미국
- **중동 관리기반 유지**
  - 태평양-지중해 해상항로 영향력 유지
  - 중동 우방국 협력 유지, 확대
  - 경제안보 연구, 협력 주도

인도
- **전방위 외교기반 확대**
  - 중동, 동아시아 동시 관여
  - 태평양-인도양-지중해 항로 거점 부상
  - 투자유치, 기술확보 등 실익

I2U2

이스라엘
- **전략적 영향력 공간 확대**
  - 걸프 및 인도양 진출 기반 마련
  - 중동 핵심국 도약 탐색
  - 글로벌 新안보 연계 강화

UAE
- **글로벌 중견국가 부상**
  - 지중해 및 인도양 진출 기반 마련
  - 해외투자 확대 등 성장 조성
  - 안보협력 강화

주요 목표 및 역할

- **주요 목표: 경제협력과 중국 및 이란 견제**

	주요 내용
경제협력	• 미래 경제 관련 협력이 핵심 목표 • 정상회담에서 **수자원, 에너지, 교통, 우주, 보건 의료 및 식량 안보** 등 6개 협력 의제 채택 - UAE는 인도에 U$20억 규모의 농업 단지 투자 시작 → 이스라엘의 관개, 종묘 기술과 결합
중국 및 이란 견제	• 중동판 쿼드 통해 中·이란의 중동 영향력 억제 • 사우디 등 안보 불안국에 미국의 안보 노력 인식 - 미국의 중동 안보 유지는 이란의 위협에 불안을 느끼는 사우디, UAE 등에 우호적 -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중동을 연계시켜 효율적 중국 견제

주요국 역할

- **미국** : 태평양~인도양~지중해를 연결하는 안보와 경제에서 중국 견제. 군사 안보 및 기술 등 제공
- **인도** : 경제협력 우선하며 중국의 중동 영향력 억지 중점
- **이스라엘** : 하이테크 기술 앞세워 중동 및 인도 진출
- **UAE** : 국부펀드 등 풍부한 자금 앞세워 기술과 제조업 능력 보유국과 협력

Ⅱ. 미국의 對중동 정책

※ I2U2(중동판 쿼드) 활용

주요 지정학 선점 및 3國 협력 강화

I2U2와 지정학적 중요성

- **호르무즈 해협, Bab Al Mandab(홍해) 및 수에즈 운하 등 지정학적 중요 지점 영향 확대**
  - 이들 지역은 UAE, 이스라엘 등과 인접
  -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LNG 1/3, 원유의 약 30% 물량 통과
  - Bab Al Mandab 해협: 지중해와 인도양 사이의 중요한 무역로
  - 수에즈 운하: 유럽과 아시아 무역 연결 고리
  - →中의 '진주목걸이', '일대일로'에 맞서는 인도-지중해 회랑 형성
- **I2U2 국가들 중 親中(UAE와 이스라엘), 反中(美, 인도)으로 구분**
  - 親中은 중국과의 대결보다 회원국의 경제 협력 우선
  - 反中은 중국과 대결 및 회원국의 경제 협력도 우선
  - → 親中의 동방정책(Look East), 반면 인도는 Look West 추진

<중동을 둘러싼 3대 주요 지정학 위치>

I2U2 활용 : 3國 협력

- **UAE~이스라엘~인도, 3國 협력 추진**
  - 인도-이스라엘, UAE-이스라엘 간 FTA 협정으로 3國 협력 강화
  - 각국의 장점 활용 협력 강화
    - **인도**: 제조강점, 인력 및 수요 시장
    - **이스라엘**: R&D, 기술, 양질의 인력
    - **UAE**: 자본, 그린수소 생산의 Test bed 제공 등

3국 협력 주요 사업

- 에너지
- 4차 산업
- 식량
- 그린경제

- **UAE~이스라엘~인도 3國 무역협정 체결 및 신규 프로젝트 시행**
  - 사막 태양광 패널 청소 로봇 공동 제작
  - UAE 태양광 발전서에 활용될 물이 필요없는(water-free) 청소로봇 개발 프로젝트
    - 이스라엘: 에코피아(Ecoppia)社 기술 제공
    - 인도: 인도 내 제조사에서 로봇 생산
    - UAE: 자금 제공(UAE-인도 협력기금 재원에서 지원)
  - → 태양광 패널 로봇 청소 산업은 '25년까지 U$110억의 가치 전망

Ⅲ. 중국의 對중동 정책

① 경제 협력 중점

에너지 안보 최우선 속 중동에서의 경제 영향력 확대

中, 중동 최대 에너지 및 경제 파트너

▪美, 이라크, 아프간 철수 등 중동 영향력 축소. 中, 중동 입지 강화
- 美의 이라크 철수 이후 중국의 이라크 원유 수입 크게 증가
  · '22년 상반기 중국으로의 이라크 원유 선적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 이라크 전체 수출의 1/3 이상 차지
- 美의 아프간 철수 이후 아프간과 파키스탄 분쟁 조정 등 영향력 확대

▪中, 바레인 제외 모든 GCC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 중동 최대 투자국 부상
- 최대 투자국은 美의 전통적 동맹국(사우디, UAE 등)이며 중국과 군사 협력도 추구
- 이란과 U$4000억 투자 및 안보 협정 체결 등 협력 확대
- 이스라엘과 최첨단 기술 공유 및 주요 전략적 항구를 중국 국영 기업에 임대 → 美 압박으로 철회

▪中, 중동으로부터 원유 30% 수입
(천연가스는 33% 수입)

국가	원유 수입 점유율(%)
사우디	15%. 최대 수입국
오만	7%. 4번째 수입국
UAE	6%. 7번째 수입국

중동과의 경제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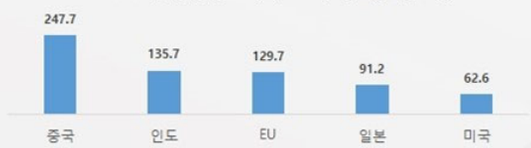
▪ '21년 중국과 GCC 국가 및 이란과의 양자 무역 총액은 U$2,480억
- 중국 수출 U$957억, 수입 U$1,520억

<중국과 GCC+이란과의 교역('21, U$)>

	수출		수입	
	수출액(U$십억)	비중(%)	수출액(U$십억)	비중(%)
바레인	1.4	1.4%	0.4	0.3%
이란	8.3	8.7%	6.5	4.3%
쿠웨이트	4.4	4.6%	17.8	11.7%
오만	3.6	3.7%	28.6	18.8%
카타르	4	4.1%	13.2	13.2%
사우디	30.3	31.7%	57	57.0%
UAE	43.8	45.8%	28.6	28.6%
총합	95.7	100.0%	152	100.0%

출처: UNCTAD, 2022

<중동에서의 주요국의 교역 비교('21, U$)>



출처: UNCTAD, 2022

Ⅲ. 중국의 對중동 정책

② 일대일로 활용

중동, 최종 기착지인 유럽 向 일대일로의 주요 거점 활용

중동은 BRI '경제 회랑'의 중심

▪중동 대부분의 국가들이 BRI에 참여
- 중동은 유럽과 아프리카 연결하는 BRI의 중간 거점
  · 중국-서아시아 회랑은 이란과 이라크를 거쳐 터키와 유럽으로 이어짐
  · 수에즈 운하를 통한 해상로는 남부 유럽과 연결
  · 중국-파키스탄 회랑은 아라비아해의 과다르 항구로 이어짐
- 주요국과 항만 사용 및 운송 인프라 건설에 중점

중국 일대일로(BRI)의 주요 중동 참여국

BRI 중동 투자 현황

▪ 주요 투자 대상국은 GCC로 U$650억(UAE U$260억, 사우디 U$206억)
- 이란은 U$130억의 투자를 받아 주요 수혜국으로 부상

▪ 주요 투자 분야는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인프라 등 다양
- '14년부터 '19년까지 중국 국영 기업의 중동 투자 U$216억
- 동 기간 중국기업의 건설 수주 계약은 U$924에 달함

<BRI 주요 투자 분야>

투자분야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소 UAE의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Solar Park에 투자
에너지	▪ Mender 유전 개발 프로젝트(U$2억9700만 투자) ▪ 오만 국영전기 회사에 투자
산업	▪ 오만 두쿰 산업단지에 U$110억 투자
인프라	▪ MENA 지역 20개 항구에 투자(해상로 강화 일환) - 아부다비 칼리파 항구 지분 90% 취득 - 카타르 하마드 항 및 UAE 화물 터미널 항만 등

▪ BRI에 따른 중국의 중동 대출도 크게 증가
- '14년 U$3억 → '18년 U$88억으로 증가

Ⅲ. 중국의 對중동 정책

③ 군사·안보 협력

중동 무기수출 확대 등 군사·안보 협력 강화

중국産 무기 구입 비중 아직은 미미

▪**중동 국가들의 중국산 무기 수입 증가 추세. 총 수입량은 '11-'15년 대비 '16-'20.6까지 25% 증가**

- 증가추세에도 불구, '10년부터 '20년까지 중국의 GCC 국가 무기 판매 비중은 전체의 2% 미만
- 중국 수출품 대부분은 무인 항공기(드론)
  · 드론은 미국이 기술 유출 우려로 판매를 제한함에 따라 중국이 중동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음

<중동 주요국의 美-中 무기 구입 현황('10-'21, U$)>

국가	미국	중국
사우디	▪ U$190억 - 패트리어트 미사일 F-35 전투기 등	▪ U$2억4,500만(1% 비중) - '14년부터 드론 구매 - 사우디에 드론 제조공장 논의
UAE	▪ U$73억 - 고고도미사일방어 체제	▪ U$1억6,600만(2% 비중) - 12대의 훈련용 및 경전투기
카타르	▪ U$42억 - F15, F35 등 전투기 - 프랑스제 U$23억 구입	▪ U$1억1,800만 - 단거리 탄도미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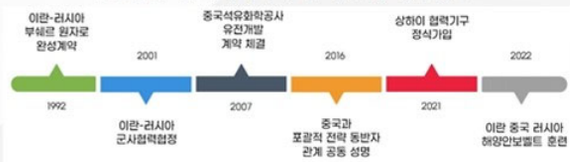
출처: SIPRI, 2022

美 대응 위해 러시아·이란과 협력 강화

▪**미국의 중동 패권 저지 위해 중·러·이란 3자 협력 확대**

- 3國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영향력에 반감 → 일부 사안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공조
- 3國 모두 외교적으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지지(美, 반대) 러-우 전쟁 원인 나토 탓으로 돌리고 있음
- 중·러, 美-이란 핵 협상 지지 → 美의 대이란 제재 완화 요구
- 이란, 중·러 주도 상하이협력기구(SCO) 가입 및 BRICS 가입 추진

<이란의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 타임라인>



▪ **각국의 이해관계 상이로 협력관계가 임시방편 일 수 있음**

- 러시아와 이란은 현재 제재된 석유 공급업체로 경쟁하고 있음
  · 이란은 러시아의 과도한 유가 할인에 불만
- 중국 역시 이란보다 이란 최대적국인 사우디, UAE 등과의 협력 중시
  · 시진핑 이란과 영토분쟁 중인 UAE에 우호적인 분쟁해결 방안 제시

Ⅳ. 미-중 갈등 활용하는 중동

사우디, 중동정세 변화 주도 위해 다자협력에 방점

중동, 美-中 전략 경쟁의 新 격전지

▪**中, 美와 사우디의 벌어진 틈을 최대한 활용하며 접근**

- 일대일로 핵심지역인 중동을 유럽과 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 활용
- 이슬람 종주국 사우디와 협력 강화로 美와 대등한 관계로 부상

▪ **美, '22년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중동 중시로 회귀**

- 러-우 전쟁 계기로 中의 중동 영향력 확대에 맞서 중동 지키기 진력(盡力)

▪ **美, 中과의 경쟁 강화로 인·태 전략으로 확대**

- 美 국방부,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확대
- 전략 목표는 자유롭고 열린 인·태 지역 구상
- 핵심요소는 ① 다차원적 대비태세, ② 동맹들과 파트너십, ③ 지역 국가들과 네트워크 강화 등

[美의 인·태 전략 vs. 中의 일대일로 전략]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

사우디, 중동 정세 변화의 핵심

▪**빈 살만, 적극적 중립주의*로 美-中 경쟁에서 핵심 역할**

*적극적 중립주의: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서 누구와도 손을 잡는 의미(국립외교원 인남식 교수)

- 사우디, 高유가 위한 감산 정책 지속 및 中과 경제협력 강화
- 다급해진 美는 사우디와 관계 재설정 및 이란과 핵 협상 재개 시도

【 중동을 둘러싼 정세 변화 】

미국	-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중재 시도 → 우방 및 동맹 복원으로 美 영향력 회복
중국	- 美와 차별한 아랍국 지지 확대 ※ 팔레스타인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선언
사우디	- 美 의존 벗어나 中과 협력 시도(사우디판 安美經中) ※ 이스라엘과 수교를 지렛대로 美에 안보 요구
이란	- 러-우 전쟁 이후 심화된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 희망 → 美와 잠정적 核 합의 위한 협상 시도

자료: 전문가 대담 등 POSRI 정리

V. 역내 정세 안정화 우선

사우디-이란 앙숙 관계에서 '전략적 데탕트'로 전환

中은 사우디, 美는 이란과 관계 개선 추진

- **中, 사우디-이란 중재로 중동에서 영향력 확대**
  - 美, 사우디-이스라엘 국교 수립 추진으로 이스라엘과 아랍국 관계 개선 도모 및 이란과 핵 협상 재개 모색
  - 사우디·이란, 경제발전 위해 '현실주의적 균형외교' 전환 (서정민 한국외대 교수)

공동의 이익 위해 해묵은 갈등 봉합

- **사우디-이란 화해, 시리아 아랍연맹 복귀 등 역내 긴장 완화**
  - 오랜 적대국인 사우디와 이란·시리아의 화해는 역내 정치 안정화에 기여
  - → 사우디·이란, 상대국에 대사 파견 공식업무 재개(9.5.)
  - · 특히 사우디와 이란 간 대리戰 중인 예멘 내전 종식 전망
  - '23.3월 사우디-튀르키예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 경제 협력 강화

【 최근 중동內 정세 변화 】

자료: 전문가 대담 등 POSRI 정리

☞ **이-팔 전쟁으로 이스라엘-사우디 국교 수립, 미-이란 관계 개선 등 美의 중동 전략 차질 전망**

VI. 중동 新 세력 균형 모색

중동, 中·러와 군사·경제 협력강화로 균형외교 추진

- **중동, 에너지 및 산업 다각화로 기존 美·유럽 중점에서 브릭스(BRICS) 및 상하이 협력기구(SCO) 등과 협력 강화**
  - 사우디·이란·UAE, BRICS 신규 회원 가입으로 중·러시아와 협력 강화('24.1.1.부터 정회원)
- **파워 밸런스 변화에도 불구, 중동의 군사 안보 키는 美, 반면 경제는 Look East* 정책**

* Look East: 중동의 아시아 중시

중동 외교적 다각화로 新 파워밸런스 추구

- 이란, 핵 협상 지지부진
- 사우디, 원유감산 문제로 관계 악화
- 러-우 전쟁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로 중동産 원유 수입 감소 전망

관계 소원 → 美 영향력 축소

관계친밀 → 中 영향력 확대

- **사우디** : 美와 안보관계 유지, 中과 에너지 및 산업다각화 협력 강화. BRICS 가입
- **이란** : 핵 협상 교착상태 이후 러와 군사협력, 中과 경제협력 강화. SCO 및 BRICS 가입

- 中, BRICS, SCO 활용 중동 우군 확보
- 중동을 일대일로 핵심 거점 선정
  - 일대일로 최대 투자 지역

☞ **高유가 유지 및 美 의존 탈피 위해 세력 확대 중인 다자협력기구 가입 등 외교·안보 다각화 시도**

Ⅶ. 산업 다각화로 다자협력 강화

중동, 탈에너지 등 산업 다변화 정책 시행 위해 韓中印과 협력 강화

중동 산업 다각화

▪ 원유 수요 정체로 산유국 경제성장 및 재정 악화 우려
- 중동 산유국은 재정수입의 80%, 수출의 90%를 원유·천연가스로 충당
- 재정악화로 국민복지 유지 불가시 정치불안 예상→ OPEC 협력 통한 감산

【 중동 주요국 균형재정 유가 】

자료: IMF, 2023

▪ 脫에너지 및 일자리 창출 위해 사우디 등 산업 다각화 추진
- 신도시(네옴 시티 등)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건설, 제조업, 관광업 촉진
- 에너지 패권 지속을 위해 경쟁력 있는 그린 에너지 선점

▪ 美·유럽 의존도 줄이고 韓·中·印 등 아시아와 협력 확대
- 건설, IT, 에너지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韓·中 등과 협력 확대 희망
※ 美의 미온적인 기술 및 자본 투자에 사우디 등 반감

네옴 프로젝트와 수소산업

NEOM City 사우디 장기 마스트 플랜 '비전 2030' 핵심

▪ 빈 살만, 네옴 시티 건설 추진하며, 국내외 영향력 과시
- 세계 최대 건축 프로젝트 기반, 다자협력 강화(중, 러, 인도, EU 등)

※ NEOM City 사업 개요
• 규모 : 26,500km²(서울의 44배), 거주 인구 : 9백만 명
• 투자 금액: 1단계- U$5천억, 2단계까지 U$1조
• 핵심 사업 : (1) 직선 도시(The Line), (2) 해상산업단지(OXAGON), (3) 관광 단지(TROJENA), (4) 해상 관광 단지(SINDALAH)

수소 산업 재생e 및 천연가스 활용 저렴한 수소 생산

▪수소경제 선점으로 Post-Oil 시대에도 에너지 패권 야망
- 사우디, UAE, 오만 등에서 다수의 그린수소 프로젝트 진행

【 중동 주요국의 수소(H2) 프로젝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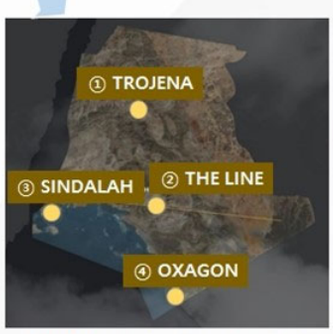
사우디	• 네옴 프로젝트 : 일일 650톤 수소 및 140만톤 암모니아 생산
오만	• 두쿰 프로젝트 : 연간 22만톤 수소 및 120만톤 암모니아 생산
UAE	• ADNOC 수소동맹, '25년 그린 암모니아 20만톤 생산

자료: 주요 언론 종합 POSRI 작성

12

[참고] NEOM Project

사우디, 비전2030 달성 위해 대형 프로젝트 추진



• 4개 지역으로 구성된 NEOM 프로젝트
- Phase Ⅰ (2019~2025) 마스터플랜 완성, 기본 인프라 공사 착수
• Phase Ⅱ (2025~) 신도시 완공 및 지속성장 Follow up

4대 프로젝트	주요 내용
① TROJENA 	"The mountains of NEOM" • 해발 1,500~2,600m 사이에 조성되는 휴양도시 - 야외 스키장 및 각종 스포츠 활동 가능 시설 건설 - 세계 수준의 관광지 건설로 관광객 유치 목적 • '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에 활용 추진
② THE LINE 	"New Wonders for the world" • 길이 170km, 폭 200m, 높이 500m의 첨단도시 - 자율 주행차 운행 등 최첨단 스마트 시티 구현 • 그린수소(H2)·태양광·풍력 등 100% 재생E 사용 •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에 대표 도시로 추진
③ SINDALAH 	"A luxury island destination in the Red Sea" • 럭셔리한 여행과 체험을 제공하는 해양 휴양도시 - '24년 개장을 목표로 실질적인 모습을 갖추는 단계 • NEOM 프로젝트 중 가장 현실적인 곳으로 빈-살만의 비전 실현 여부와 진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
④ OXAGON 	"Redefining the traditional industrial model" • 최고 해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해양 산업도시 - 최대 규모의 해상 산업도시 건설 • 인더스트리 4.0과 순환경제의 최첨단 방식 결합 → 미래 제품생산 위한 공장건설과 혁신적 사업 도시

자료: 사우디 정부 자료 종합(2023)

State Capacity and Asylum Policy Liberaliz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김은경 & 한성민 (한국외국어대학교)

State Capacity and Forced Displacement Policy in the Developing World

Eun Kyung Kim (HUFS)
Sung Min Han (HUFS)

Forcibly Displaced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 Forcibly Displaced People (FDP): Refugees and asylum seekers
- Over 76% of the world's 108.4 million FDP live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 20% of the total FDP are hosted by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 Developing countries are deficient in resources to accommodate refugees with housing, healthcare, education, etc.

Source: World Vision Canada

State capacity and FDP hosting – Motivation

- Growing importance of state-building to achieve the country's goals while dealing with increasing uncertainties in economic stability, climate change, global health, and regional security
- Divergent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trajectories in the global South is greately associated with how the governments have performed in reaction to political stability, conflict resolution, resource management, etc. (e.g., Collier 2011, Fukuyama 2004, Reno 1998)
- FDP presence has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the receiving states.
- In this context, hosting FDP is a grave matter of concern.

Research questions

- ❑ Why do some developing countries adopt liberal forced displacement policies while some countries do not?
- ❑ How does state capacity account for this variation?

Positive effects of liberal asylum policy on the host

- International economic assistance (e.g., Adelman and Sorenson 1994, Gorman 1993, Crisp 2002, Dreher et al. 2019, Freier et al. 2021)
- International publicity (Jacobson 1996)
- Improves local development and prevent public backlash (Zhou et al. 2022)
- Strengthens patronage within politically and strategically important areas (Betts 2021)
- Used as a means to create ethno-religious homogeneity (Rae 2002, Vigneswaran 2013, Adamson et al. 2020)

➢A refugee-hosting country has a number of benefits of hosting.

Effects of liberal asylum policy on FDP (Demand side)

- Low-income countries pursue vague policies and delegate FDP management to int'l orgs and NGOs to insulate themselves from politically fraught decisions about FDP (Norman 2020)
-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laces with restrictive and inclusive policies (Aksoy and Ginn 2022)

- De jure policies on FDP affect where forced migrants flee in the developing world (Blair et al. 2022)
  - Gravitation toward liberal environments is conditional on factors that facilitate the diffusion of policy knowledge, such as transnational ethnic kin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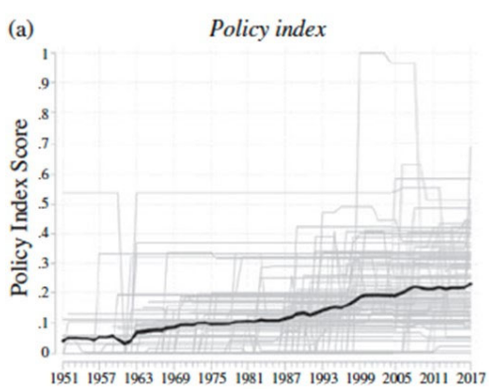
➢Liberal policies attract more FDP even in developing countries (Betts et al. 2017).

How many FDP will they receive? (Supply side)

- Increased inflows raise concerns among host countries of increase in the costs of hosting because larger displacement populations are costlier to manage, ceteris paribus (Weiner 1993)
- "Institutional weakness gives the better-financed and more experienced UNHCR and other refugee orgs. an advantage ... and limits the host govt's ability to resist their pressure (Jacobson 1996)."
- Selective exercise of sovereignty (Abdelaaty 2021)
  - Policymakers consider relations with refugee-sending country
  - Policymakers consider political competition among ethnic groups
  - When these international and domestic incentives conflict, they shift responsibility to the UNHCR

➢ While the de facto openness to refugees fluctuates over time, the de jure policy liberalization gradually increases (Blair et al. 2021).

An upward trend in asylum policy liberalization in Global South (Blair et al. 2021)



Risks of FDP hosting in developing countries

- Violence
  - Conflicts occur in the first two years after the FDP reception (Coniglio et al. 2022)
  - Without economic development, greater risk of conflict (Zhou et al. 2021)
  - The camp environment and integration of refugees matter (Fajth et al. 2019)
  - Conflicts occur more frequently in camps than self-settlement; and if refugees are located in areas with politically marginalized host groups (Fisk 2019)
- In the short run, violenc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disease propagation; and in the long run, infrastructure, trade, and labor markets are the key channels that determine the impact on the host (Maystadt et al. 2019)
- The landless, agric. workers, net food buyers (Verwimp and Maystadt 2015) and the locally disadvantaged (Whitaker 2002) are more vulnerable to refugee inflows

State capacity (SC)

- What is state capacity?
  - "The state's ability to perform the core functions most commonly deemed necessary for modern states" (Hanson and Sigman 2021): extractive, administrative, and coercive capabilities
- What is not?
  - Its effect on society
  - Political regimes
  - Issue of state autonomy
  - The power of civil society or the private sector
  - Not as simple as a monopoly of force

State capacity and FDP hosting in developing countries

- SC makes possible:
  - Effective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e.g., Hendrix 2010, Sundberg et al. 2012)
  - Minimizing the negative externality and better adapt to a new envr. (Adamson 2006)
  - Better social (IMF 2016, Maystadt and Verwimp 2014) and labor-market integrations of refugees (Thielemann 2018)
  - *More private investments* (regardless of refugee hosting) (Foa 2022, Cheng et al. 2022, Besley 2020)

➢Low level of conflict caused by refugee population increase

➢Economic growth

➢Human development

The argument

❖Capable developing states with confidence in refugee management are more likely to formulate liberal forced displacement policies.

Alternative explanations on FDP policy liberalization

- Domestic politics/Ethnic politics (e.g., Rüegger and Bohnet 2018, Weiner 1993)
- Int'l relations: relation with the sending country, int'l norms, donor pressure (e.g., Bermeo 2016, FitzGerald and Cook-Martin 2014, Natter 2018)
- Foreign aid (e.g., Hartigan 1992, Boswell 2003)
- Regime type (Czaika 2009, Wellman 2020)
- A breakout of civil war in the neighborhood (Jacobsen 1996, Rüegger 2019)

Data and Variables

- Panel Data: Unbalanced country-year panel data on state capacity and refugee and asylum policy between 1972 and 2015 across 75 developing countries
- Main Variables
- 1) Legal FDP policy liberalization (***de jure***) of refugee and asylum policy
  - **DWRAP** (Developing World Refugee and Asylum Policy) Dataset (Blair, Grossman, and Weinstein 2022)
  - Level of refugee and asylum policy liberalization interpreting national-level migration laws in 92 developing countries
  - Combine 5 dimensions of FDP Policy (Access, Service, Livelihoods, Movement, and Participation)
- 2) State Capacity
  - State Capacity (Hanson and Sigman 2021)
  - Latent dimension of the state capacity
  - Use 21 different indicators of the state capacity
  - Administrative Efficiency, Bureaucratic Quality, Census Frequency, Efficiency of Revenue Mobilization, Fiscal Capacity, Information Capacity, Law and Order, Military Personnel per 1,000 in population….
- 3) Realization of refugee and asylum policy
  - Size of refugee population from UNHCR
  - ***FDP population/Total population***

Estimation and Controls

- OLS regression with two way (country-, year-) fixed effect.
- Controls: Intense, Proximate Civil War (Blair et al. 2022), Elite Kin Discrimination (Blair et al. 2022), GDP per capita (log)_PPP adjusted (PWT), Democracy (Electoral Democracy Index, Vdem), Aid per GDP (WDI), Civil War (PRIO), Terrorism (ITERATE)

(1) State Capacity and Forced Displacement Policy Liberalization

Findings (1)

	DV: FDP Policy Liberalization					
	(1) Policy Index	(2) Access Field	(3) Service Field	(4) Livelihood	(5) Movement	(6) Participation
State Capacity	0.028***	0.049***	0.030***	0.020***	0.067***	0.009**
	(0.005)	(0.009)	(0.005)	(0.005)	(0.009)	(0.004)
Fixed Effect?	Yes	Yes	Yes	Yes	Yes	Yes
Controls	Yes	Yes	Yes	Yes	Yes	Yes
Countries	75	75	75	75	75	75
N	3,494	3,494	3,494	3,494	3,494	3,494

***p<0.01, ** p<0.05, * p<0.01

(2) Why countries adopt liberal policies?

Findings (2)

	DV: Net ODA per capita (World Bank)	
	(1)	(2)
FDP Policy Liberalization	34.854***	33.193***
	(7.993)	(8.822)
State Capacity	-1.856	-9.673***
	(2.342)	(2.832)
Fixed Effect?	Yes	Yes
Controls	No	Yes
Countries	75	75
N	3,332	2,888

***p<0.01, ** p<0.05, * p<0.01

(3) Does Policy Liberalization lead to an increase in inflows of refug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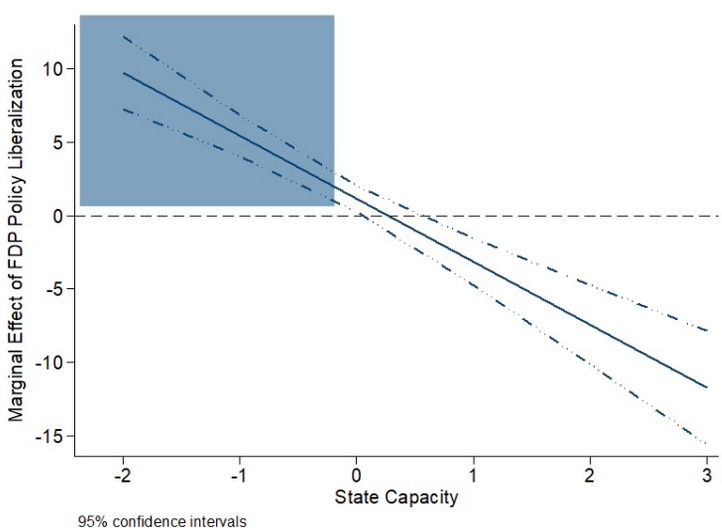
Findings(3)

	DV: FDP Pop/Total Pop			
	(1)	(2)	(3)	(4)
FDP Policy Liberalization	1.079***	0.606	1.561**	1.141***
	(0.399)	(0.397)	(0.452)	(0.452)
State Capacity	0.997***	1.689***	1.244***	1.899***
	(0.128)	(0.151)	(0.164)	(0.188)
FDP Policy Liberalization × State Capacity		-4.345***		-4.288***
		(0.522)		(0.6221)
Fixed Effect?	Yes	Yes	Yes	Yes
Controls	No	No	Yes	Yes
Countries	74	74	73	73
N	2,461	2,461	2,179	2,179

***p<0.01, ** p<0.05, * p<0.01

Moderating Effect of State Capacity

Weak State Capacity: Policy Liberalization → Greater Inflows of Refugees



(4) FDP Population affect ODA reception?

Findings (4)

	DV: Net ODA per capita (World Bank)	
	(1)	(2)
FDP Policy Liberalization	32.249***	27.043***
	(7.803)	(8.159)
State Capacity	-3.470	-7.542**
	(2.553)	(3.009)
FDP Pop/Total Population	**-14.074**	**-20.316**
	(40.207)	**(41.507)**
Fixed Effect?	Yes	Yes
Controls	No	Yes
Countries	73	75
N	2,280	2,168

***p<0.01, ** p<0.05, * p<0.01

Summary of results

1. Countries with stronger SC are more likely to adopt liberal FDP policies.
   - ➢SC has a positive effect on all dimensions of the policy (access, services, livelihoods, movement, and participation)
2. Countries with liberal de jure FDP policies are more likely to receive greater ODA (Particularly with weaker state capacity)
3. In countries with weaker state capacity, policy liberalization brings about refugee influxes to a greater extent.
4. A FDP population does NOT have an effect on the ODA reception.

Implications

- This study illustrates the importance of SC for crisis management such as refugee hosting.
  - The absence of SC would lead to an intractable problem of the mass inflows of FDP even when int'l assistance is available.
  - In an environment of negative spillovers such as frequent civil conflicts in the neighborhood, how can a state make a breakthrough and move forward?
- We suggest, though it is not as easy as it sounds, the key is from within.
- "The best get better."
- Int'l assistance programs should focus more on state-capacity building.

Thank you!

- Q&A

2세션. 중동과 아프리카 협력 메커니즘의 과거, 현재와 미래
Session 2.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ooperation Mechanisms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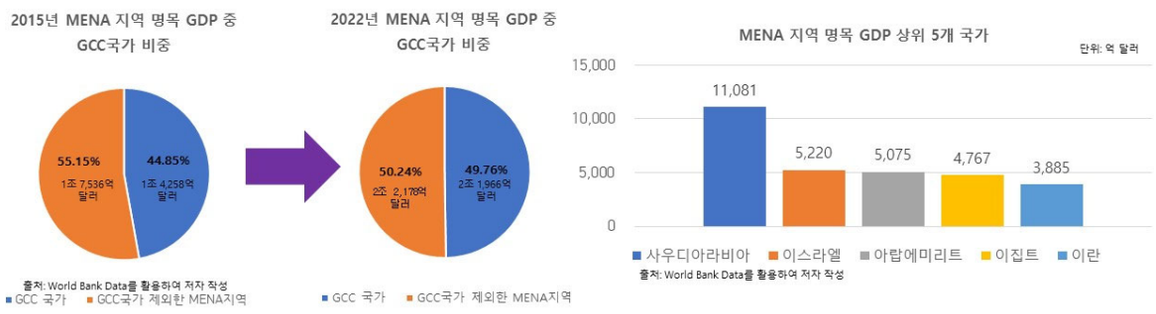
[좌장 Chair]
주동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Dong-Joo JOO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GCC국가와 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
  GCC Oil Exporters and Petrodollar Recycling
  송상현 (단국대학교)
  Sang Hyun Song (The GCC Institute, Dankook University, Korea)
- 에너지전환 시대 화석연료 활용 논의와 중동의 과제
  Use of Fossil Fuels in the Era of Energy Transition and Challenges facing the Middle East
  유광호 (KIEP)
  Kwang-Ho Ryou (KIEP, Korea)
- 중동 아프리카 에너지 보조금 정책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on energy subsidies in the MENA region
  강문수 (KIEP)
  Munsu Kang (KIEP, Korea)
- 모로코 농촌 개발협력 모델로서 아르간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가치창출
  Argan GIAHS conservation and value creation as a model for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Morocco
  김덕수 (전북대학교)
  KIM Deok S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UAE and the Regional Strategic Transformation
  John Harrison (Rabdan Academy)

GCC국가와 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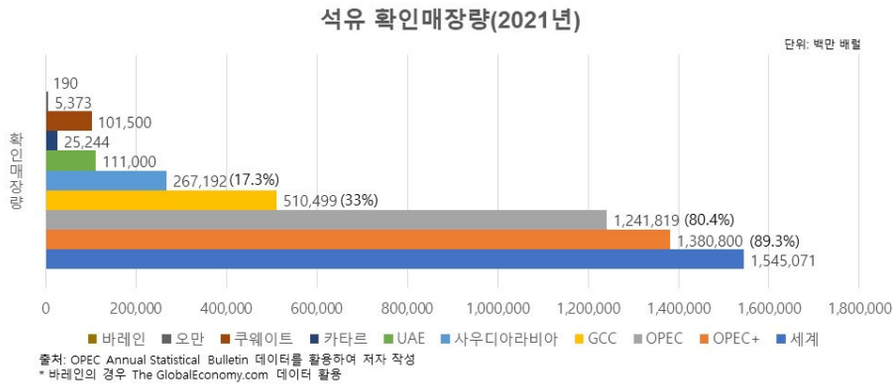
송상현 (단국대학교)

GCC국가경제 규모



- World Bank(WB)에 따르면 2022년 GCC국가는 MENA지역 명목 GDP 약 4조 4,144억 달러 중 약 2조 1,96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약 50% 차지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인한 큰 폭의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GCC국가와 MENA 지역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각각 약 7.6%와 5.8%로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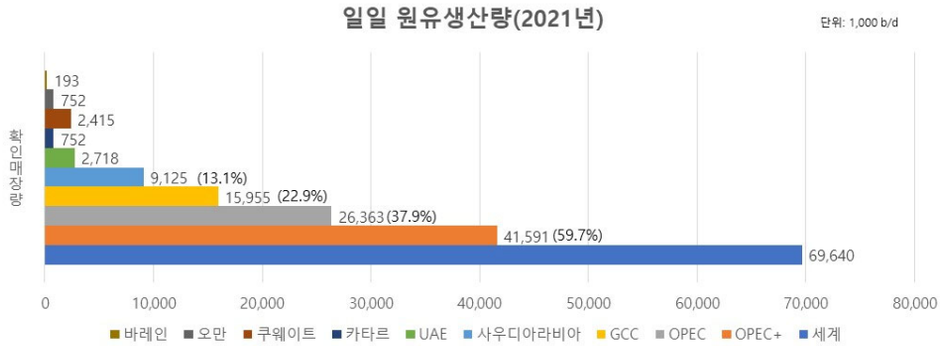
GCC국가의 석유산업(1)



출처: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바레인의 경우 The GlobalEconomy.com 데이터 활용

- 2021년 GCC국가의 석유 확인매장량은 약 5,105억 배럴로 전 세계 확인 매장량 약 1조 5,451억 배럴의 약 33%를 차지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확인 매장량은 약 2,672억 배럴로 GCC 전체 확인 매장량의 52.3%, OPEC 전체 확인 매장량의 약 41.1% 그리고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의 약 17.3%에 해당함. 베네수엘라 다음 세계에서 두번째 많은 확인 매장량 기록

GCC국가의 석유산업(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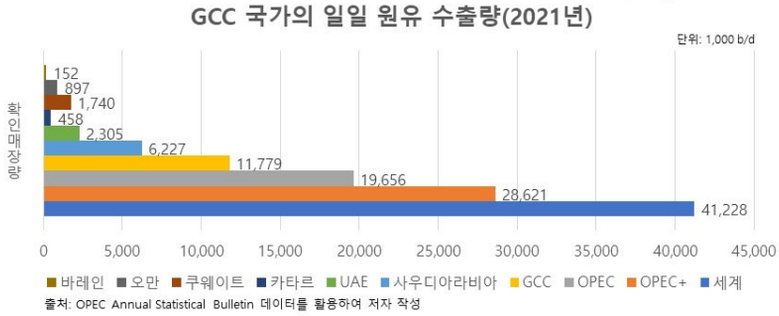


출처: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21년 GCC국가의 일일 원유생산량은 1,596만 배럴로 전 세계 일일 원유생산량 6,964만 배럴의 약 22.9%를 차지함
- 사우디아라비아 일일 원유생산량은 913만 배럴로 GCC 일일 원유생산량의 약 57.2%, OPEC 일일 원유생산량의 약 34.6% (OPEC+의 약 22%), 그리고 전 세계 일일 원유생산량의 13.1%에 해당함.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러시아 다음 3번째로 많은 석유를 생산함

GCC국가의 석유산업(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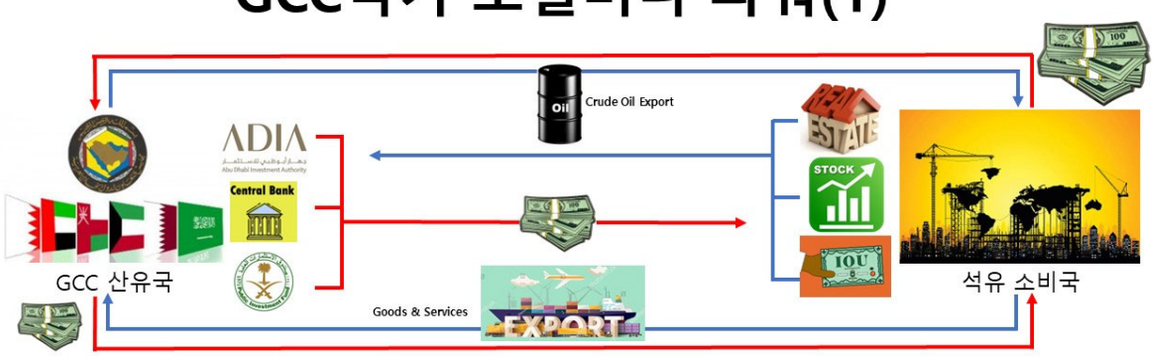
GCC 국가의 일일 원유 수출량(2021년)



출처: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21년 GCC국가는 전체 원유 생산량(일일 1,596만 배럴)의 약 73.8%에 해당하는 일일 약 1,178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함. OPEC+는 전체 원유 생산량(일일 4,159만 배럴)의 약 68.8%애 해당하는 일일 2,862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함
- GCC국가는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약 28.6%를 차지하고 있음. OPEC+는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약 69.4%를 차지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GCC 원유 수출량의 52.9%, OPEC+ 원유 수출량의 21.8%,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15.1%를 차지함. EIA에 따르면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수출로 거둔 수입이 3,110억 달러로 OPEC 전체 수입의 약 35%에 해당함

GCC국가 오일머니 파워(1)



- 1974년 이후 원유의 U.S. Dollar 거래로 세계 경제에서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 유지에 석유가 중요한 역할 수행함. 이처럼 산유국들이 석유수출을 통해 거두어 들인 달러를 " 페트로 달러(Petrodollar)"라고 함
- 석유 수출로 경제규모 필요 이상으로 유입된 GCC 국가의 페트로 달러는 1) 국내 소비 및 투자에 필요한 해외 상품 및 서비스 구매(해외기업의 인프라 구축 참여 및 무기 구매 포함) 2)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 같은 기관의 해외자산 보유(주식, 채권, 부동산)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석유 소비국들에게 다시 유입되어 재활용되는데 이를 "페트로 달러 리사이클링 " 이라 함

GCC국가 오일머니 파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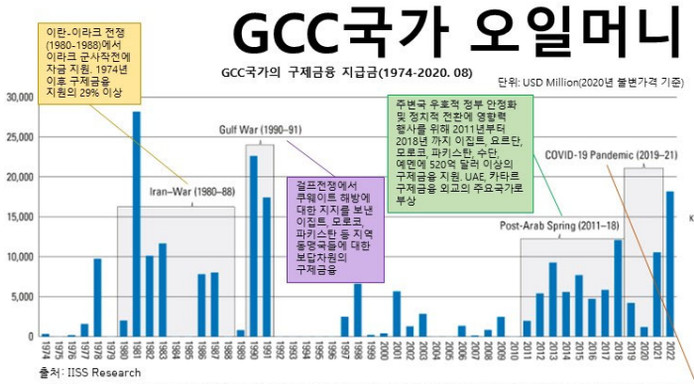
상위 20위 국부펀드(2023년 7월 기준) 단위: US달러

순위	국부펀드명	국가	총 자산
1	Norway Government Pension	노르웨이	1,371,813,762,200
2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중국	1,350,863,000,000
3	SAFE Investment Company	중국	1,019,600,000,000
4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UAE	853,000,000,000
5	Kuwait Investment Authority	쿠웨이트	803,000,000,000
6	Public Investment Fund	사우디아라비아	776,657,356,350
7	GIC Private Limited	싱가포르	770,000,000,000
8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Investment Portfolio	홍콩	514,223,020,000
9	Tamasek Holdings	싱가포르	492,208,248,000
10	Qatar Investment Authority	카타르	475,000,000,000
11	National Council for Social Security Fund	중국	473,799,060,897
12	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UAE	320,379,592,491
13	Mubadala Investment Company	UAE	287,473,527,432
14	Turkey Wealth Fund	튀르키예	279,261,454,214
15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한국	169,300,000,000
16	Abu Dhabi Developmental Holding Company	UAE	159,000,000,000
17	National Welfare Fund	러시아	148,350,000,000
18	Future Fund	오스트레일리아	135,838,775,226
19	Alberta Investment Management Corporation	캐나다	106,078,915,600
20	Emirates Investment Authority	UAE	87,000,000,000

출처: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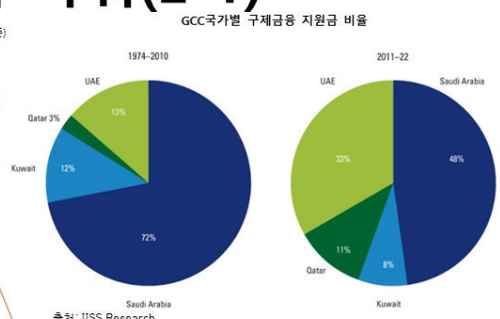
- 2023년 7월 총 자산 순위 기준 글로벌 국부펀드 상위 20위에 총 8개의 GCC 국부펀드
  UAE(5개):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4위)
  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12위)
  Mubadala Investment Company(13위)
  Abu Dhabi Developmental Holding Company(16위)
  Emirates Investment Authority(20위)
  쿠웨이트: Kuwait Investment Authority(5위)
  사우디: Public Investment Fund(6위)
  카타르: Qatar Investment Authority(10위)
- 상위 20위 국부펀드 총 자산 약 10조 5,928억 달러 중 GCC 국가 8개 국부펀드의 총 자산이 약 3조 7,615억 달러로 35.5%를 차지함. 아부다비투자청, 쿠웨이트투자청, 공공투자기금, 카타르투자청 순으로 총 자산규모가 컸으며, UAE 5개 국부펀드의 총 자산은 약 1조 7,068억 달러로 1위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보다 규모가 큼
- 상위 100개 국부펀드 내 GCC 국부펀드의 총 자산은 약 3조 8,292억 달러로 MENA 지역 국부펀드 총 자산 약 3조 9,376억 달러의 97.2%에 해당. 상위 100개 글로벌 국부펀드 총 자산 약 11조 7,565억 달러의 약 32.6%에 해당함

GCC국가 오일머니 파워(2-1)



출처: IISS Research

* IISS Research의 조사에서 석유자원의 지원 가치만 보고됨. 제공되지 않은 다른 데이터는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이 그래프에 나타난 구제금융 지급액은 과소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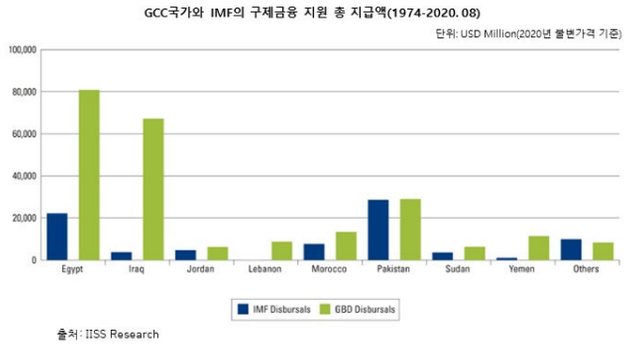


출처: IISS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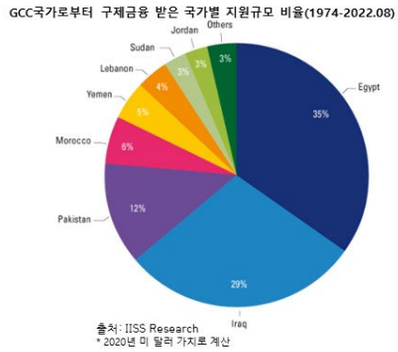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GCC 구제금융 외교의 새로운 국면 전개. 높은 에너지 및 식량 가격으로 MENA지역 대다수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반면 GCC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수혜자가 됨. GCC 국가들은 2021년부터 이집트, 파키스탄, 수단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금융 지원 약속

- GCC 국가들은 역내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서방 및 다자 공여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MENA지역 구제금융 제공자로서 독보적 역할을 하고 있음. GCC 국가들이 재정적 또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을 구제하기 위해 예산 지원, 중앙은행 예금, 석유 및 천연가스 지원을 할 수 있는 속도와 규모를 고려해 보았을 때, 지원 국가들을 충분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음
- GCC국가들의 구제금융을 통한 외교는 MENA지역의 지정학적 궤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가지 주요 에피소드를 거침(그래프 참고).

GCC국가 오일머니 파워(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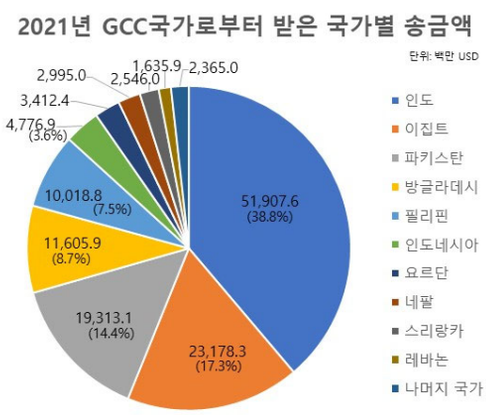
출처: IISS Research



출처: IISS Research
* 2020년 미 달러 가치로 계산

- GCC 국가들은 1974년부터 2022년까지 약 2,310억 달러(2020년 불변가격 기준) 이상을 MENA 지역 및 그 외 지역 최소 17개 국가에 지원. 동 기간 810억 달러가 조금 넘는 구제금융 지원을 했던 IMF를 포함한 양자 및 다자 공여국보다 더 많은 규모임.
- GCC 구제금융 외교는 서방의 개발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2016년 이집트에 승인된 120억 달러 패키지, 2022년 파키스탄에 승인된 11억 7천만 달러 패키지 등 MENA 지역에 대한 IMF의 대출 중 일부는 GCC 국가들의 보완적 자금 조달을 통해 가능함

GCC국가 오일머니 파워(3-1)



출처: World Bank, KNOMAD

- 2021년 GCC국가로부터 세계 각국으로 유입된 송금액은 약 1,337억 5,470만 달러를 기록함. 세계 각국에 송금된 금액이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순으로 많음
- 사우디와 UAE로부터 해외로 송금된 금액은 각각 469억 5,360만 달러, 449억 2,600만 달러로 전체 GCC 송금액의 약 68.7%에 해당함
- GCC국가로부터 가장 많은 송금액을 받은 국가는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요르단 순으로 나타남
- GCC국가 전체 송금액에서 인도 38.5%, 이집트 17.3%, 파키스탄 14.4%, 방글라데시, 8.7%, 필리핀 7.5%를 차지하며 상위 5개 국가가 총 86.7% 차지함

GCC국가 오일머니 파워(3-2)

2021년 이집트와 요르단으로 유입된 국가별 송금액

단위: 백만 USD

순위	이집트로 송금국가	송금액	요르단으로 송금국가	송금액
1	사우디아라비아	8,141.3	사우디아라비아	1,481.7
2	UAE	8,094.1	UAE	1,115.2
3	쿠웨이트	3,699.8	미국	609.6
4	미국	1,838.4	쿠웨이트	351.5
5	카타르	1,770.8	팔레스타인	294.8
6	이탈리아	1,156.7	카타르	234.1
7	바레인	780.2	오만	123.7
8	요르단	716.0	리비아	119.7
9	오만	692.1	바레인	106.3
10	캐나다	596.9	튀르키예	98.2
11	레바논	499.1	독일	92.5
12	독일	358.5	캐나다	89.5
13	영국	314.9	인도네시아	63.8
14	프랑스	303.7	이라크	51.7
15	튀르키예	249.6	영국	36.6

출처: World Bank, KNOM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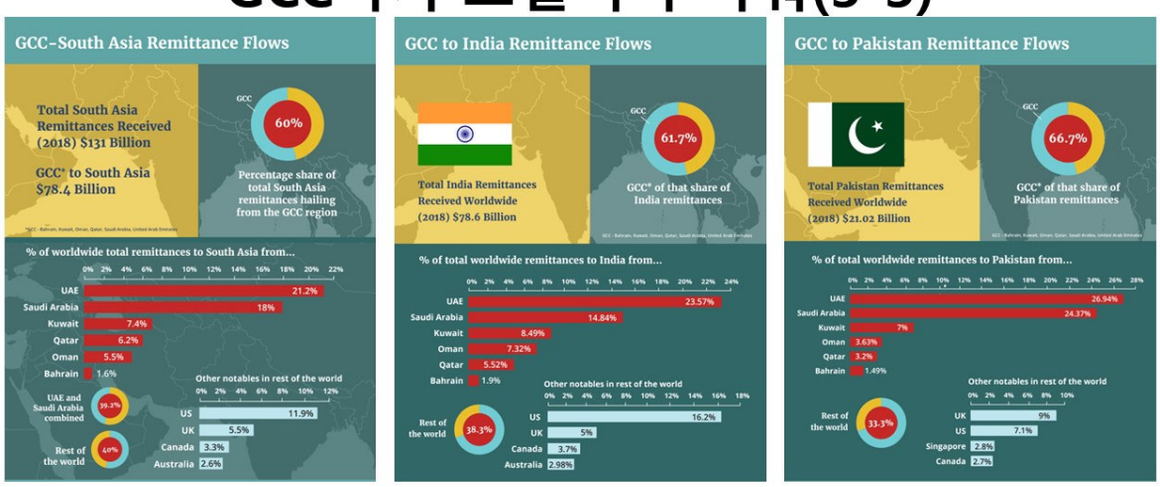
- 1977년부터 2021년 사이 국외로부터 이집트로 유입된 송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44% 기록함. 2021년 이집트로 유입된 총 송금액은 약 314억 8,700만 달러로 GDP의 7.79% 차지함. 이 중 GCC국가로부터 받은 송금액은 약 231억 7,830만 달러로 전체 송금액의 약 73.6% 차지함

  (송금액의 이집트 GDP 차지비중: 최저 2000년 2.86%, 최고 1992년 14.58%, 2021년 7.79%)

- 1972년부터 2021년 사이 국외로부터 요르단으로 유입된 송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6.58% 기록함. 2021년 요르단으로 유입된 총 송금액은 약 51억 6,230만 달러로 GDP의 11.29% 차지함. 이 중 GCC국가로부터 받은 송금액은 약 31억 7,520만 달러로 전체 송금액의 약 66.1% 차지함

  (송금액의 요르단 GDP 차지비중: 최저 1972년 2.63%, 최고 1984년 24.9%, 2021년 11.29%)

GCC국가 오일머니 파워(3-3)



출처: The Arab Gulf States Institute in Washington

GCC국가 오일머니 파워(4)

외환보유고 상위 15위 국가(2014년 & 2023년 7월 기준)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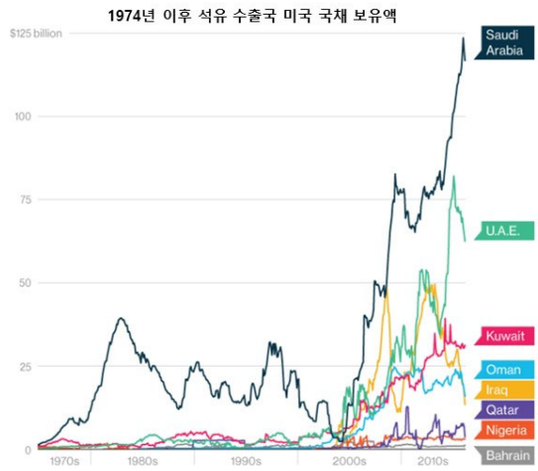
순위	국가	2014년 외환보유고	국가	2023년 7월 외환보유고
1	중국	3,900,039.3	중국	3,267,838.0
2	일본	1,260,680.3	일본	1,201,114.0
3	사우디아라비아	744,440.5	인도	603,870.0
4	스위스	545,787.2	러시아	589,966.0
5	미국	434,426.1	싱가포르	442,121.8
6	러시아	386,216.3	사우디아라비아	426,919.4
7	브라질	363,570.2	한국	421,803.8
8	한국	362,834.6	브라질	345,476.0
9	홍콩	328,457.8	태국	220,789.2
10	인도	325,081.0	폴란드	181,861.8
11	싱가포르	261,582.7	카타르	160,622.4
12	멕시코	195,681.6	체코	142,989.2
13	독일	193,484.7	인도네시아	137,673.6
14	알제리	186,350.9	말레이시아	112,900.0
15	태국	157,162.7	필리핀	99,701.7

출처: World Bank, KNOEMA

- GCC 국가들은 2014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저유가 기조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사용함 ➔ GCC국가의 총 외환보유고는 2014년 대비 줄어듦
-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고는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많은 약 7,444억 달러 상당. 2015년 약 1,100억 달러 이상 소진하며 약 6,270억 달러를 2020년에는 약4,729억 달러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2022년 외환보유고는 약 4,782억 달러로 2014년 대비 여전히 35.8% 적은 규모임
- GCC국가의 총 외환보유고는 2014년 약 9,238억 달러 기록.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7년 약 6,756억 달러까지 줄어듦. 2021년 이후 유가가 회복되면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약 7,215억 달러와 7.389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 기록
- 2022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4개국의 외환보유고는 2014년 대비 증가함. UAE는 약 784억 달러에서 약 1,384억 달러, 쿠웨이트는 약 352억 달러에서 약 525억 달러, 오만은 약 163억 달러에서 약 176억 달러, 카타르는 약 432억 달러에서 약 474억 달러로 증가

GCC국가 오일머니 파워(5-1)

1974년 이후 석유 수출국 미국 국채 보유액



출처: U.S. Treasury Department, Bloomberg

- 1974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석유를 구매하고 사우디에 군사원조와 장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우디는 수 십억 페트로 달러를 미국 국채 매입에 사용하여 미국 재정지출에 자금을 조달하기로 비밀협정을 체결함
- 파이잘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은 사우디의 국채 매입에 대해 철저한 비밀 유지를 요청함. 미국 재무부는 1970년대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배려하여 미국 국채 보유국 조사에서 쿠웨이트, UAE, 나이지리아 등 14개의 국가들과 함께 "석유수출국"이라는 일반적인 제목으로 분류하여 41년간 자료를 제공함
- 콜롬비아대학의 David Spiro가 쓴 "The Hidden hand of American Hegemony: Petrodollar Recycling and International Markets"에 따르면 1977년까지 사우디가 미국 국채의 20%를 보유함

GCC국가 오일머니 파워(5-2)

미국 국채 보유 주요 국가(2023.01)

단위: 십억 USD

순위	국가	미국국채 보유액	순위	국가	미국 국채 보유액
1	일본	1104.4	16	사우디아라비아	111.0
2	중국	859.4	17	한국	105.8
3	영국	668.3	18	노르웨이	104.4
4	벨기에	331.1	19	독일	91.3
5	룩셈부르크	318.2	20	버뮤다	77.4
6	스위스	290.5	21	네덜란드	73.7
7	케이맨 제도	285.3	22	UAE	64.9
8	캐나다	254,1	23	오스트레일리아	62.2
9	아일랜드	253.4	24	멕시코	58.2
10	대만	234.6	25	태국	52.8
11	인도	232.0	26	필리핀	48.8
12	홍콩	226.8	27	이스라엘	46.1
13	브라질	214.0	28	쿠웨이트	43.3
14	싱가포르	187.6	29	이라크	41.2
15	프랑스	183.9	30	폴란드	40.9

출처: U.S. Treasury Department, Federal Reserve Board

- 2014년 6월 30일 기준 Middle East Oil Exporters(GCC 6개국, 이란, 이라크)는 총 6,010억 달러의 미국국채를 보유함
- 2016년 5월 Bloomberg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요청으로 40년 이상 비밀에 부쳐져 왔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국채 보유 자산 공개
- 사우디의 미국 국채 공식 보유액이 1,170억 달러로 공개됨. 이는 사우디의 외환보유고 5,870억 달러의 20%에 불과하며 중앙은행이 일반적으로 2/3 가량 보유하는 달러 자산보다 훨씬 낮은 수치임. 사우디가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를 통해 타 국가에 숨겨 보유한 국채를 포함할 경우 실제 2배 이상 더 많을 것으로 추정
- 2016년 4월 사우디는 미국 의회가 9.11테러 공격에 대해 미법원에서 사우디에 책임을 묻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7,5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및 기타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경고함
- 2023년 1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16번째로 많은 총 1,110억 달러 미국 국채를 보유함. UAE는 649억 달러의 미국채를 보유함

GCC국가 오일머니 파워(7)

Top 10 Largest Companies in 2022 by Market Capitalization[a]

Rank	Company	Country/Territory	Sector	($ Bil.)
1	Apple	U.S.	Technology	2,508
2	Saudi Aramco	Saudi Arabia	Energy	2,170
3	Microsoft	U.S.	Technology	1,910
4	Alphabet	U.S.	Technology	1,412
5	Amazon	U.S.	Technology	1,298
6	Tesla	U.S.	Technology	847
7	Berkshire Hathaway	U.S.	Financial	612
8	UnitedHealth	U.S.	Consumer Services	483
9	Meta	U.S.	Technology	431
10	Johnson & Johnson	U.S.	Consumer Services	428

[a]As of September 2, 2022.

출처: Global Finance

Top 10 of the 2022 Fortune Global 500[a]

Rank	Company	Country	Revenues ($ Mil.)	Revenues (% Change)	Profits ($ Mil.)	Profits (% Change)
1	Walmart	U.S.	572,754	2.4	13,673	1.2
2	Amazon	U.S.	469,822	21.7	33,364	56.4
3	State Gride	China	460,617	19.1	7,138	27.9
4	China National Petroleum	China	411,693	45.0	9,638	110.6
5	Sinopec Group	China	401,314	41.4	8,316	34
6	Saudi Aramco	Saudi Arabia	400,399	74.3	105,369	113.8
7	Apple	U.S.	365,817	33.3	94,680	64
8	Volkswagen	Germany	295,820	16.5	18,187	80
9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hina	293,712	25.3	4,444	24.2
10	Volkswagen	U.S.	292,111	8.7	7,910	10.2

[a]Fiscal year ended on or before March 31, 2022.

출처: Global Finance

- 2022년 9월 2일 기준 시가총액 글로벌 10위 기업 중 사우디 아람코가 약 2조 1,700 달러를 기록하며 약 2조 5,080억 달러를 기록한 애플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2022년 3월 31일 혹은 이전 마감 회계연도 기준 매출 순위 상위 10개 기업 중 사우디 아람코가 약 4,004억 달러를 기록하며 6위를 기록함. 하지만 순이익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사우디 아람코가 약 1,05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 1위를 차지함

GCC국가 오일머니 파워(6)

2018-2022년 주요 무기 수입국가

순위	국가	글로벌 무기수입 비중(%)
1	인도	11
2	사우디아라비아	9.6
3	카타르	6.4
4	호주	4.7
5	중국	4.6
6	이집트	4.5
7	한국	3.7
8	파키스탄	3.7
9	일본	3.5
10	미국	2.7

출처: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23 Summery," 11.

-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사우디아라비와 카타르가 글로벌 무기 수입 비중의 9.6%와 6.4%를 차지하며 인도에 이어 각각 2위, 3위에 오름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에 따르면 2022년 MENA지역의 국방비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2,030억 달러기록. 반면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IISS)는 2022년 MENA지역 국방비를 2,070억 달러로 발표하면서 2021년 1,730억 달러보다 34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계산함
- SIPRI에 따르면 GDP대비 글로벌 GDP 비중이 평균 2.2%인데 반해 중동지역 국가는 3.9%로 높게 나타남

GCC국가 오일머니 파워(6)

2022년 글로벌 국방비 지출 순위(40위)

순위	국가	국방비(10억 달러)	순위	국가	국방비(10억 달러)
1	미국	877	21	타이완	12.5
2	중국*	292	22	싱가포르	11.7
3	러시아*	86.4	23	튀르키예	10.6
4	인도	81.4	24	파키스탄	10.3
5	사우디아라비아*	75.0	25	콜롬비아	9.9
6	영국	68.5	26	알제리	9.1
7	독일	55.8	27	인도네시아	9.0
8	프랑스	53.6	28	멕시코	8.5
9	대한민국	46.4	29	노르웨이	8.4
10	일본	46.0	30	쿠웨이트	8.2
11	우크라이나	44.0	31	그리스	8.2
12	이탈리아	33.5	32	스웨덴	7.7
13	오스트레일리아	32.3	33	벨기에	6.9
14	캐나다	26.9	34	이란	6.8
15	이스라엘	23.4	35	스위스	6.1
16	스페인	20.3	36	오만	5.8
17	브라질	20.2	37	태국	5.7
18	폴란드	16.6	38	칠레	5.6
19	네덜란드	15.6	39	덴마크	5.5
20	카타르	15.4	40	루마니아	5.2

출처: SIPRI Fact Sheet April 2023, "Trend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2," 2.
* 추정데이터

-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방비 지출 규모로 중동지역 1위 글로벌 5위를 기록함
- SIPRI에 따르면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는 GDP의 7.42%에 해당하는 약 750억 달러, UAE는 GDP의 5.64%에 해당하는 약 228억 달러(2014년 기준), 카타르는 GDP의 6.96%에 해당하는 154억 달러, 쿠웨이트는 GDP의 4.53%에 해당하는 약 82억 달러, 오만은 GDP의 5,17%에 해당하는 약 58억 달러, 바레인은 GDP의 3,17%에 해당하는 약 14억 달러의 국방비를 기록함
- SIPRI에 따르면 2022년 중동지역(북아프리카 제외, 이스라엘과 터키 포함) 국방비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1,840억 달러를 기록.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비의 16% 증가는 중동지역 국방비 증가에 크게 기여함. 카타르 국방비는 전년 대비 22%의 큰 폭으로 증가함


감사합니다

에너지전환 시대
화석연료 활용 논의와 중동의 과제

유광호 (KIEP)

에너지전환시대 화석연료 활용 논의와 중동의 과제

유 광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3년 10월 28일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 에너지전환 기조와 전통에너지 수급 현황

Ⅱ. 부문별 논의 및 중동의 대응 분석

Ⅲ. 결론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 에너지전환 기조와 전통에너지 수급 현황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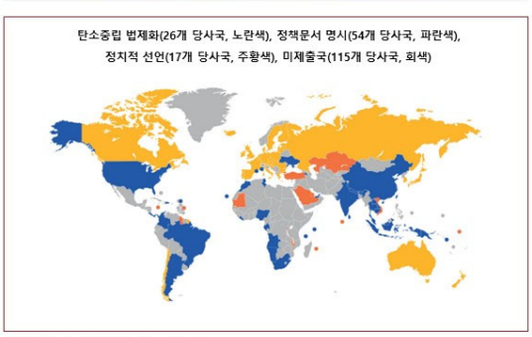
에너지전환 기조와 전통에너지 수급 현황

기후변화 대응 위한 국제사회 노력

국제사회 및 주요국 정부 주도로 기후변화 대응 위한 화석에너지 수요 억제 노력 지속

- 2021년 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NDC 재검토 합의 이후, 166건 NDC 중 142건 갱신 또는 신규 제출
- 화석에너지 투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축소된 상황이며, 최근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정에너지 대비 속도와 규모 측면에서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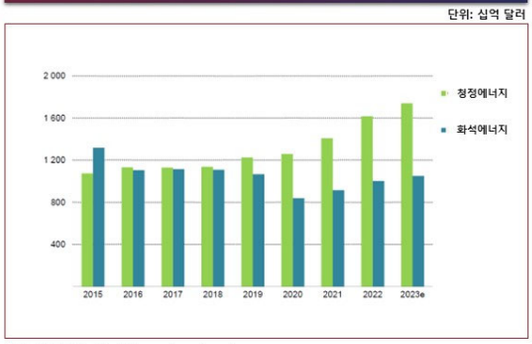
전 세계 탄소중립 추진 현황



자료: Climate Watch, Net Zero Tracker.

전 세계 화석/청정에너지 투자 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EA(2023), World Energy Investment.

4

에너지전환 기조와 전통에너지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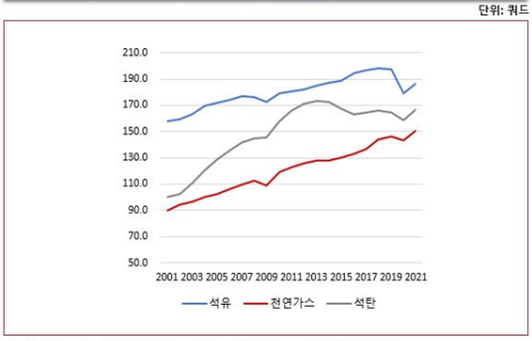
전통에너지 수급 현황

화석에너지 수요는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에너지 소비 대비 비중 축소

- 화석에너지 수요는 지난 20년(2001-2021)과 지난 10년(2011-2021) 각각 연평균(CAGR) 1.9%, 0.7% 확대
- 반면 전체 에너지 소비량 대비 글로벌 화석에너지 소비량 비중은 지난 20년간 2.4%p, 10년간 3.3%p 축소

화석에너지별 글로벌 소비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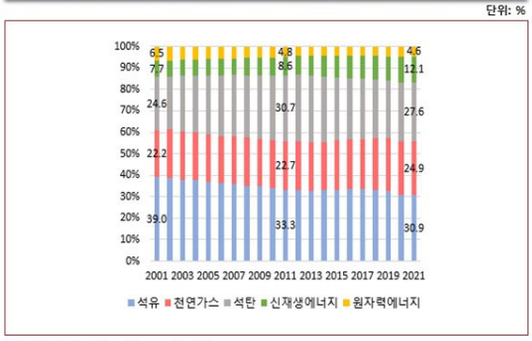
단위: 쿼드



주: 쿼드(Quad)는 1,000조 Btu(Quadrillion British Thermal Units)의 약자임.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에너지원별 글로벌 소비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5

에너지전환 기조와 전통에너지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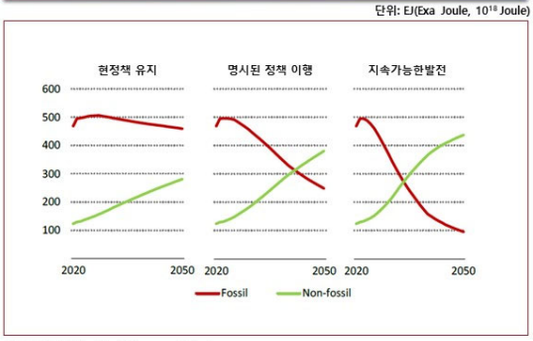
전통에너지 수급 전망

현 시장 현황을 미루어 볼 때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국제사회의 의지 표명은 확고한 상황이나, 2장에서 살펴 볼 각 부문별 변화가 화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실질적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향후 화석에너지 수급 규모는 국제에너지기구 '현정책 유지'와 '명시된 정책 이행' 시나리오 사이에서 각 시점의 에너지 시장 상황에 따라 큰 변동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국제에너지기구 시나리오별 전통에너지 수급 예측

단위: EJ(Exa Joule, 10^{18} Joule)



자료: IEA(2023), World Energy Outlook.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필요조건과 현실 상황 대비

자료: IEA(2021), Net Zero by 2050; Center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 China Permits Two New Coal Power Plants per Week in 2022.

6

Ⅱ. 부문별 논의 및 중동의 대응 분석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문별 논의 및 중동의 대응 분석_안보

산유국의 수급 상황 전략적 활용 유인 증가

전통에너지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을 활용하여 외교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산유국 유인 확대

- 친환경 기조로 산유국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투자 감소에 따라 전통에너지 수급 상황이 타이트해지면서 이를 활용하려는 산유국 유인 확대
- 러시아의 대EU 천연가스 공급 중단, OPEC+ 감산 지속 등을 일환으로 해석 가능
- 산유국의 자원 무기화 기조에 따른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 비용의 상승은 에너지전환 저해 요인으로 작용

2022년 EU 에너지 안보 관련 주요 타임라인

일시	국가	내용
02. 24.	러시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02. 26.	이탈리아	에너지 수급 조기경보 발령
03. 30.	오스트리아	에너지 수급 조기경보 발령
03. 30.	독일	에너지 수급 조기경보 발령
03. 31.	러시아	천연가스 구매 대금에 대한 루블화 결제 의무화
05. 11.	러시아	유럽 내 가스프롬 자회사에 제재 부과
06. 14.	러시아	노드스트림 공급 축소
06. 21.	독일	에너지 수급 경보 발령
09. 03.	러시아	노드스트림 공급 중단

자료: IEA(2022), Gas Market Report Q4-2022.

국제유가 추이

단위: 달러/배럴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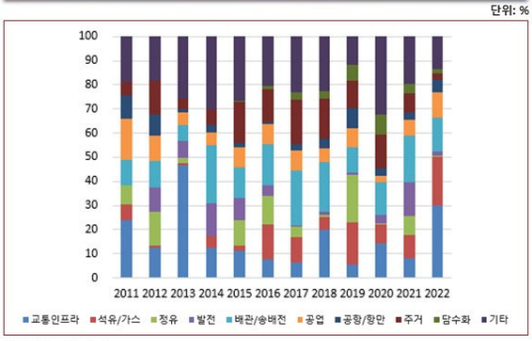
8

부문별 논의 및 중동의 대응 분석_안보

산유국의 수급 상황 전략적 활용 유인 증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사업 수주액 대비 부문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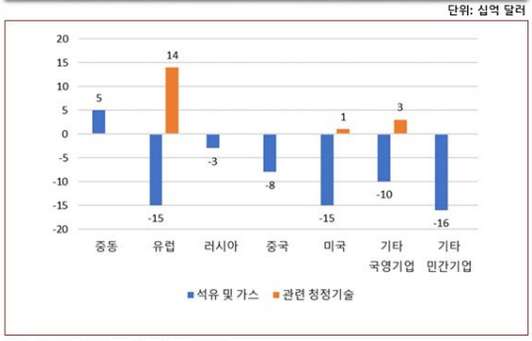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Meed Projects.

2019년 대비 2022년 지역별 석유 및 가스 부문 투자규모 변화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EA, World Energy Investment 2022.

9

부문별 논의 및 중동의 대응 분석_에너지원

천연가스 활용 움직임 확대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로 천연가스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교량연료(Bridge Fuel)로 주목

- 천연가스는 백만Btu당 117.0파운드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이는 무연탄(228.6 파운드), 경유(161.3 파운드) 휘발유(157.2 파운드)보다 낮은 수치
- 다수 국가에서 각국 청정에너지 전환 계획에 천연가스 비중을 유지·확대하며 2016년 이후 천연가스 소비증가율이 석유 및 석탄의 소비증가율을 지속해서 상회
- 다만 천연가스 역시 탄소 배출이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생산부터 연소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에 걸쳐 상당량의 메탄 발생

화석에너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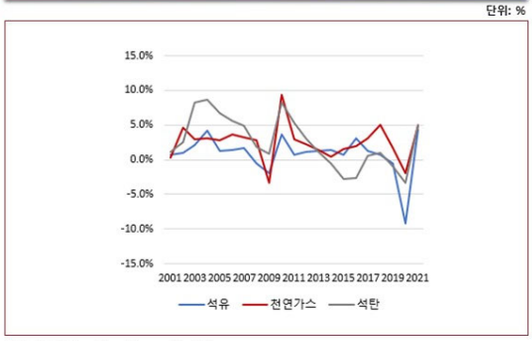
단위: 파운드/백만 Btu

연료		이산화탄소 배출량
석탄	무연탄	228.6
	역청탄	205.7
	갈탄	215.4
	아역청탄	214.3
경유		161.3
휘발유		157.2
프로판		139.0
천연가스		117.0

자료: EIA, How much Carbon Dioxide is Produced When Different Fuels Are Burned?.

화석에너지별 글로벌 소비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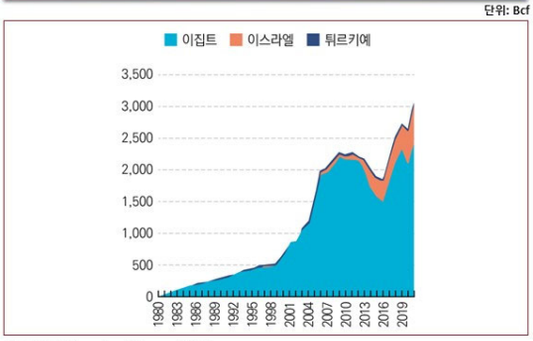
10

부문별 논의 및 중동의 대응 분석_에너지원

천연가스 활용 움직임 확대

동지중해 산유국의 천연가스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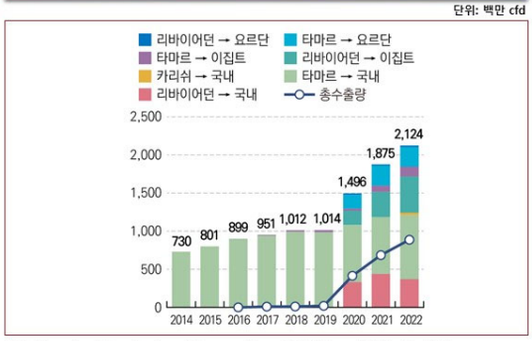
단위: Bcf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이스라엘 천연가스 생산량 및 수출량 추이

단위: 백만 cfd



자료: Mees, Israel Sees Gas Export Revenues Surge 58% to Record $2.3bn for 2022.

11

부문별 논의 및 중동의 대응 분석_에너지원

천연가스 활용 움직임 확대

주요 천연가스 보유국의 확인매장량 규모

순위	국가	확인매장량 (Tcf)	전 세계 총 확인매장량대비 비율(%)	생산량 (Bcf/일)	R/P 비율 (%)
1	러시아	1,320.5	19.9	22,548.4	58.6
2	이란	1,133.6	17.1	8,856.9	128.0
3	카타르	871.1	13.1	6,049.4	144.0
4	투르크메니스탄	480.3	7.2	2,083.6	230.7
5	미국	445.6	6.7	32,298.8	13.8
6	중국	296.6	4.5	6,851.0	43.3
17	이집트	75.5	1.1	2,065.9	36.6
28	이스라엘	20.8	0.3	523.9	39.7
31	사이프러스	13.0	0.2	-	-
전 세계		6,641.8	100.0	3,853.7	48.8

자료: BP(2021),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2년에 발견된 동지중해 주요 천연가스전

국가	천연가스전	운영 회사	발견 시기	예상 매장량(Tcf)
이집트	나르기스-1X(Nargis-1X)	셰브론	12월	3.5
이스라엘	아테나(Athena)	에니지안	5월	0.3
	헤르메스(Hermes)	에니지안	10월	0.2-0.5
	제우스-1(Zeus-1)	에니지안	10월	0.5
사이프러스	크로노스-1(Cronos-1)	에니	8월	2.5
	제우스-01(Zeus-01)	토탈	12월	2~3

자료: Middle East Institute, Eastern Mediterranean Gas Discoveries, Progress, and What to Watch in 202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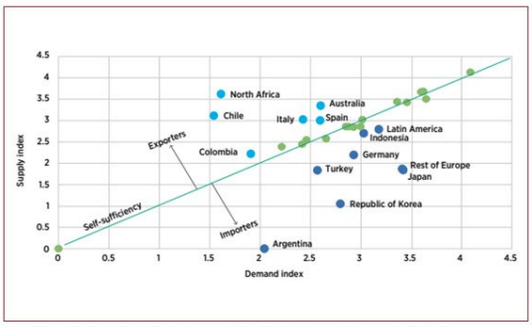
부문별 논의 및 중동의 대응 분석_기술 개발

산업 내 친환경 기술 개발

전통에너지 산업 내 친환경 기술 개발 강화 추세

- 수소,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 석유 산업 내 첨단 친환경 기술 적용 움직임 확대
- 2020년 1GW가 채 되지 않는 역내 수소 생산용량을 2030년 40GW로 확장하고자 하는 EU 수소 전략(Hydrogen Strategy) 등 최근 수소 산업 육성에 대한 주요국 관심 증대
- 단, 현 수소 생산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생 및 개질수소는 탄소 발생이 불가피하며, CCUS와 이를 통해 포집된 탄소 활용 기술은 상용화까지 시간 필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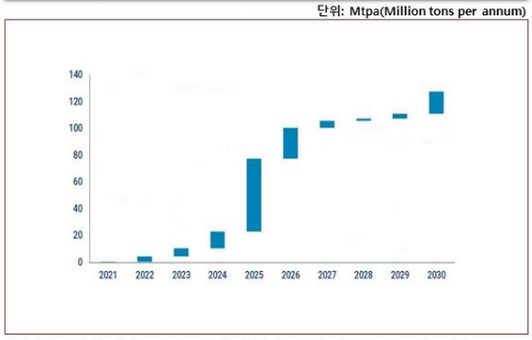
각국 연간 수소 공급 및 수요 규모 전망(2050년)



주: 지표는 연간 전망치를 PJ(Peta Joule, 10^{15} Joule) 단위로 나타낸 뒤 상용로그를 취함.
자료: IRENA(2022), Global Hydrogen Trade to meet the 1.5°C Climate Goal.

향후 10년 간 예정된 전 세계 CCUS 프로젝트 규모

단위: Mtpa(Million tons per ann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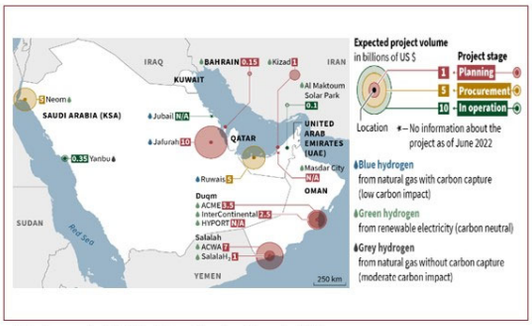


자료: Wood Mackenzie, Can Carbon Capture Help Big Oil Reach its Net Zero Targets?

부문별 변화 및 중동의 대응 분석_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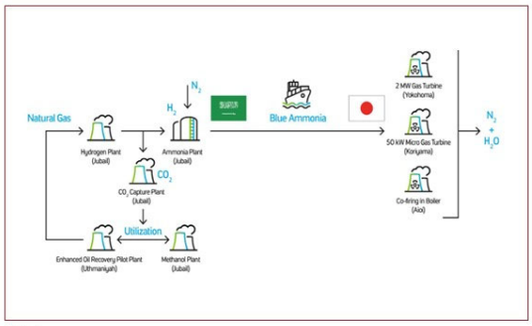
산업 내 친환경 기술 개발

GCC 내 주요 수소생산 프로젝트



자료: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사우디-일본 블루수소 공급망 시범사업 구조도



자료: Aramco.

부문별 논의 및 중동의 대응 분석_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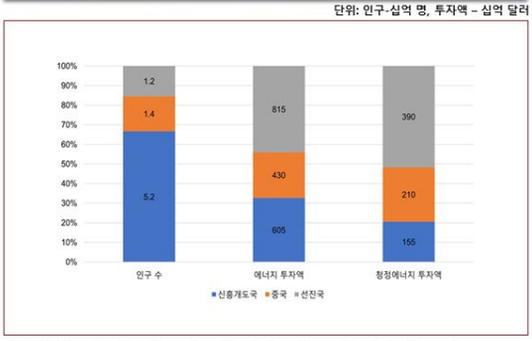
지역별 에너지전환 격차 발생

청정에너지 투자 대부분이 선진국과 중국에 집중되는 등 에너지전환에 있어 지역별 격차 발생

- 2019-23년 전 세계 청정에너지 연간 투자 규모 총 증가분의 90% 이상이 선진국과 중국에 집중
- 에너지전환은 비용이 큰 데 반해 이익은 모두가 누릴 수 있어 무임승차 유인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반적인 사기 저하 및 외교적 갈등 발생 가능

지역별 청정에너지 투자 규모 및 비중(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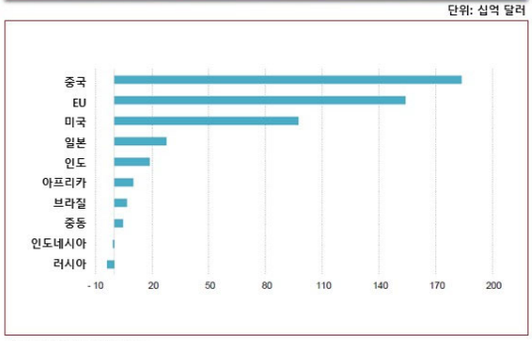
단위: 인구-십억 명, 투자액 – 십억 달러



자료: IEA, Financing Clean Energy Transitions in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2019-23년 청정에너지 연간 투자 증가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주: 2023년은 전망치로 계산.

자료: IEA(2023), World Energy Investment.

15

감사합니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동 아프리카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강문수 (KIEP)

MENA 지역 에너지 보조금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시사점

강문수, Ph.D.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

본 발표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MENA 지역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시사점(발간 예정)』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인용하지 말 것.

1. 서론

- 전 세계 에너지보조금 규모는 연간 5천억~5조 2천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탄소 배출 감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G20 정상들은 에너지 보조금 완전 철폐 선언.
- 그러나 MENA 지역의 GDP 대비 에너지 보조금 비중은 7.2%(2021년 기준)로 세계 평균(0.8%)을 크게 상회함.
- MENA 지역은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사회보장 서비스 확충을 위해 에너지 보조금 감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료 가격 및 전기세 인상이 정국 불안정과 취약계층의 빈곤 심화를 유발할 수 있어 감축 정책을 선뜻 시행하기 어려움.

1. 서론

- 그러나 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MENA 지역의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진 바가 없어 에너지 보조금 개혁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가늠하기 어려움.

- 특히 MENA 지역은 권위주의 정부 특성상 대면 설문조사 실시가 어려워 보조금 정책에 관한 인식 연구가 최근 들어서야 진행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1) 에너지 보조금과 사회보장 서비스에 관한 인식 분석 2) 정부 보조금 정책 개혁에 관한 인식 분석을 통해 MENA 지역 에너지 보조금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2. 선행연구

- 에너지 보조금 감축에 따라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면 빈곤 심화와 사회보장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랍의 봄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함(Osorio 2017; Bloch 2019).

- 에너지 시위는 에너지 가격 인상, 보조금 폐지 등의 이유로 발생했으며 저소득국에서 발생한 시위 역시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됨(Natalini et al. 2020; Ortiz et al. 2013; Price 2022).

- 에너지 보조금 감축에 따른 사회보장 정책 확대는 정책 수혜자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산층 혹은 기준에 미달하는 중하위계층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피해도 예상되며(Osorio 2017; Tran et al. 2021) 보조금 감축분을 빈곤층 지원에 투입해도 불평등 문제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Cuesta et al. 2015).

2. 선행연구

- **다만 보조금 개혁이 항상 사회적 불안정 및 소요로 이어지지는 않아 보조금 정책 개혁의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도 있음(Natalini et al. 2020; Price 2022).**

3. 설문 조사

- **온라인 설문은 2023년 7월 14~27일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튀니지 등 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짐.**

표: 설문조사 구성

분류	주요 내용
인구학적 특성	• 연령, 성별, 학력, 직업군, 소득 수준
정부의 보조금 개혁	• 보조금에 대한 인식, 보조금 축소 혹은 확대가 이뤄져야 하는 근거, 가격 안정화 주체, 보조금 축소 시 정책 대안
에너지 가격 변화	• 에너지 가격 안정화/사회보장 서비스 선호도, 에너지 가격 상승시 정부 정책 선호도, 에너지 가격 상승히 영향을 받는 집단
보조금 개혁의 사회적 영향	• 보조금 개혁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정부 에너지 보조금 정책	• 현행 정부 에너지 정책 선호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주요 정책에 대한 정부 책무성

3. 설문 조사

- **국별로 500명 이상이 응답하여 총 2,040명이 응답했으며 대체로 18~49세 집단의 응답 비중이 높음.**

표: 설문 응답자의 성비

성별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남성	59.8	49.4	49.1	49.7
여성	40.2	50.6	50.9	50.3
N	522	506	511	501

표: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별 비중

연령대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18~29세	27.2	33.4	39.7	33.3
30~39세	27.4	25.7	27.0	29.0
40~49세	28.5	18.2	19.6	22.0
50~59세	14.4	13.6	11.5	11.6
60~69세	2.1	8.3	2.2	3.2
70세 이상	0.4	0.8	0.0	0.9
N	522	506	511	501

4. 분석 결과: 에너지 소비 비중

- **응답자의 62.5%는 소득 대비 에너지 소비 비중이 10~30%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0~10% 수준인 응답자도 17%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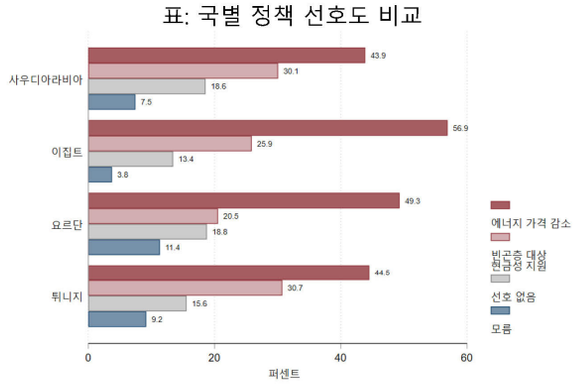
표: 소득 대비 에너지 소비 비중 분포

소득 대비 에너지 소비 비중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4개국 평균
0~10%	13.2	18.0	15.5	21.4	17.0
10~20%	33.9	34.4	23.9	32.9	31.3
20~30%	30.3	30.0	34.6	29.9	31.2
30~40%	12.3	11.1	14.3	9.4	11.8
40~50%	4.4	3.2	3.9	3.2	3.7
50~60%	3.1	1.6	3.1	1.2	2.3
60~70%	1.5	1.0	2.4	1.2	1.5
70~80%	1.3	0.8	2.4	0.8	1.3
N	522	506	511	501	2,040

4. 분석 결과: 정책 선호도

- MENA 4개국 응답자는 대체로 에너지 가격 인하 정책을 빈곤층 대상 현금성 지원보다 선호함.
- 이러한 경향은 이집트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요르단과 튀니지 응답자는 선호 없음 혹은 모름 응답 비중이 각각 30.2%와 24.8%에 달함.

표: 국별 정책 선호도 비교



4. 분석 결과: 정책 선호도

-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평균 소득 이상 집단이 에너지 가격 인하 정책을 더욱 선호하는 반면, 평균 소득 이하 집단은 두 가지 정책에 대해 선호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4개국 중 튀니지는 평균 소득 이상 집단에서 빈곤층 대상 현금성 지원을 더욱 선호한다는 응답률이 10%p 더 높았음.

표: 소득 집단에 따른 정책 선호도

국가	소득 집단	에너지 가격 하락	빈곤층 대상 현금성 지원	선호 없음	모름
사우디아라비아	평균 소득 이하	37.92	27.92	22.08	12.08
	평균 소득 이상	48.94	31.91	15.60	3.55
이집트	평균 소득 이하	52.22	25.93	16.30	5.56
	평균 소득 이상	62.29	25.85	10.17	1.69
요르단	평균 소득 이하	41.80	20.58	22.19	15.43
	평균 소득 이상	61.00	20.50	13.50	5.00
튀니지	평균 소득 이하	44.58	25.70	16.87	12.85
	평균 소득 이상	44.44	35.71	14.29	5.56

4. 분석 결과: 정책 선호도

- **에너지 가격 상승할 시 정부 대응 정책 선호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한 정부 재정 지출 순으로 나타남.**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에너지 가격 인하 정책을 선호하나, 외부 충격에 의한 가격 급등이 발생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표: 가격 상승 시 대응 정책

정책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4개국 평균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한 정부 재정 지출	20.31	18.18	18.98	15.17	18.19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45.40	54.74	39.33	46.31	46.42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지원	17.62	13.64	14.68	15.37	15.34
유류세 등 에너지 관련 세금 인하	15.33	12.06	26.81	22.95	19.26
기타	1.34	1.38	0.20	0.20	0.78
N	522	506	511	501	2,040

4. 분석 결과: 설문 실험

- **응답자를 무작위에 의해 여러 집단으로 분리하고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방식의 하나로 설문 실험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통제 집단과 3개의 처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문구를 제시하고 에너지 보조금 감축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봄.**

- **이를 통해 에너지 보조금 감축을 위해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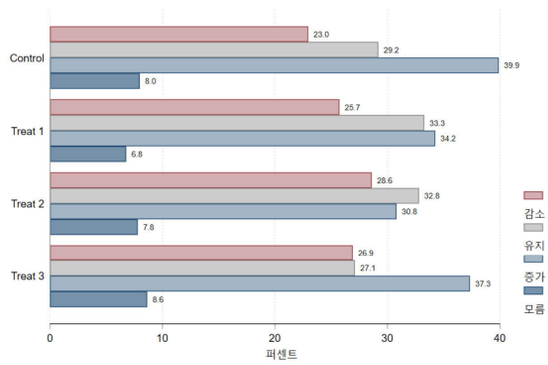
글상자: 설문 실험 문구

- 통제 집단: 문구 없음.
- 처치 집단 1: 정부는 정부 부채를 줄이라는 국제기구의 조언에 따라 에너지 보조금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 처치 집단 2: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국내 화석연료 소비량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보조금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 처치 집단 3: 정부는 사회 서비스 확대와 빈곤층·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보조금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4. 분석 결과: 설문 실험

- 보조금 개혁에 대해 대체로 보조금을 유지 혹은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그러나 통제 집단에 비해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시, 보조금 인상에 대해 동의하는 비중이 소폭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통제집단과 처치3 간에는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음 ->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조금 감축에 동의하지 않음.

그림: 집단별 보조금 개혁 선호도



1. 서론 2. 선행연구 3. 설문 조사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4. 분석 결과: 설문 실험

- 보조금 축소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보조금 정책이 불평등하고 친부자 정책이라는 인식 때문임.
- 처치2 집단에서는 환경적인 영향을 두번째 이유로 나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캠페인의 중요성
- 보조금 축소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통제집단과 처치3집단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보조금 축소에 찬성하는 이유

이유	통제	처치1	처치2	처치3
불평등하고 친부자 정책	48.3	39.8	40.6	41.6
납세자에 부담	28.8	21.8	23.1	19.7
소비 왜곡	22.0	12.0	16.8	24.8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22.0	18.8	27.3	19.0
생산 왜곡	21.2	16.5	18.2	18.2
정치인과 연계된 독과점 기업에 이익	19.5	16.5	16.1	15.3
정책의 불투명성	16.9	19.5	13.3	15.3
비공식 경제 및 불법 조장	16.1	15.0	15.4	13.9
전략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정책 결정 지연	11.0	15.8	12.6	12.4
비민주주의 및 포퓰리즘 정부 지원	10.2	9.8	6.3	14.6
투자 왜곡	9.3	16.5	18.2	13.1
기타	5.1	3.0	0.7	4.4

4. 분석 결과: 설문 실험

- 보조금 유지 혹은 증액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정책이 모든 계층에 이익이 되며 에너지 가격 인상 시 이에 대한 보상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함.
- 또한 보조금 자체가 인간의 기본권이고 사회보장 정책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임.
- 다만 특히 처치2 집단에서는 모든 계층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이 낮아 보조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전환이 다소 이뤄짐.

표: 보조금 유지/증액에 찬성하는 이유

이유	통제	처치1	처치2	처치3
모든 계층에 이익	46.5	40.1	35.8	40.9
에너지 가격 상승 시 보상	42.8	41.0	37.4	40.5
가격 유동성, 금융 리스크 및 불확실성 감소	40.6	42.7	39.9	47.6
인간의 기본권	38.0	37.0	33.3	38.1
생산비용을 낮추고 수출 경쟁력 확보	34.1	28.7	24.8	24.7
사회보장 정책으로서 중요	31.0	33.8	32.7	29.9
경제 성장 하락에 따른 보조금 수요 확대	22.0	19.2	23.6	20.4
사회적 불안정성 증가 우려	21.1	16.9	19.5	20.1
정치적 합의	12.1	11.2	10.7	11.6
기타	2.0	1.1	0.3	0.3

4. 분석 결과: 보조금 감축 시 대안 선호도

- MENA 4개국 응답자들은 에너지 보조금의 대안으로서 다른 형태의 사회 보장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정부에 대한 불신, 서비스에 대한 불신, 기존 서비스의 낮은 품질, 혹은 직접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표: 에너지 보조금 대안에 대한 선호도

정책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무상 교육 서비스	2.13 (0.96)	1.98 (0.92)	1.96 (0.98)	1.89 (0.94)
무상 의료 서비스	2.11 (0.96)	1.92 (0.89)	1.99 (1.03)	1.92 (0.91)
실업자에 대한 지원	2.24 (0.95)	2.20 (0.97)	2.12 (1.02)	2.33 (1.05)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금 지원	2.21 (0.99)	1.97 (0.94)	2.08 (0.99)	2.01 (0.96)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지원	2.67 (0.94)	2.21 (0.91)	2.15 (1.02)	2.19 (0.94)
전국민 식량 보조금 지원	2.26 (0.97)	2.18 (0.93)	2.14 (0.96)	2.23 (0.97)

5. 결론 및 시사점

- MENA 지역 응답자들은 외부 충격에 의한 급격한 에너지 가격 인상이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더욱 선호하며 이는 국내 가격 안정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임.

- 다만,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혹은 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다소 낮아져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이 요구됨.

-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에너지 보조금 유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더 많으며(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은 특별한 선호가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함) 튀니지는 사회보장 서비스 확대에 대한 찬성률이 더 높아 국가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모로코 농촌 개발협력 모델로서 아르간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가치창출

김덕수 (전북대학교)

CONTENTS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Chapter 1

FAO GIAHS 정의

GIAHS(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의지와 환경과의 상호적응을 통해 세계적으로 생물학적 다양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주목할 만한 토지이용 시스템과 경관"

FAO(2002), https://www.fao.org/giahs/background/en/

FAO GIAHS 인정 기준

인정 기준

- Food and Livelihood Security, 식량 및 생계 안전성
- Agro-biodiversity, 농업 생물 다양성
- Local and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지역적·전통적 지식 시스템
- Cultures, Value Systems and Social Organisations, 문화와 가치 체계 그리고 사회조직이 결합된 농업문화
- Landscapes and Seascapes Features, 육지 경관 및 해양 경관적 특징

FAO(2018), *What are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tage Systems?*

세계중요농업유산 현황

- 2005년부터 FAO는 24개국 78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고 있음

■ 아프리카 세계중요농업유산

국 가	등재유산 명칭	등재연도
알제리	Ghout System (Oases of the Maghreb) 고우트 오아시스 관개 시스템	2011
이집트	Dates production system in Siwa Oasis 시와 오아시스의 대추야자 생산 시스템	2016
케냐	Oldonyonokie/Olkeri Maasai Pastoralist Heritage 올도니오뇨키와 올케리 마사이 목축민 유산	2011
모로코	Oases System in Atlas Mountains 아틀라스산맥의 오아시스 시스템	2011
	Argan-based agro-sylvo-pastoral system within the area of Ait Souab-Ait Mansour 아르간기반 농업·임업·목축 시스템	2018
	The ksour of Figuig: oasis and pastoral culture around the social management of water and land 피기그의 크수르: 물과 땅의 사회적 관리를 중심으로 한 목축문화와 오아시스	2022
튀니지	Gafsa Oases 가프사 전통 오아시스	2011
	Hanging gardens from Djebba El Olia 제바 엘 올리아 공중정원	2020
	Ramli agricultural system in the lagoons of Ghar El Melh 가 엘멜 석호의 람리농업 시스템	2020
탄자니아	Engaresero Maasai Pastoralist Heritage Area 엥가레세로 마사이 목축민 유산 지역	2011
	Shimbwe Juu Kihamba Agro-forestry Heritage Site 심부 쥬 키암바 혼농임업 유산	2011

모로코 아르간 농·임·목축 세계중요농업유산 시스템

Chapter 2

Argan 기반 농·임·목축 세계중요농업유산

UNESCO 무형문화유산/FAO 세계중요농업유산

UNESCO 아르간 생물권보전지역(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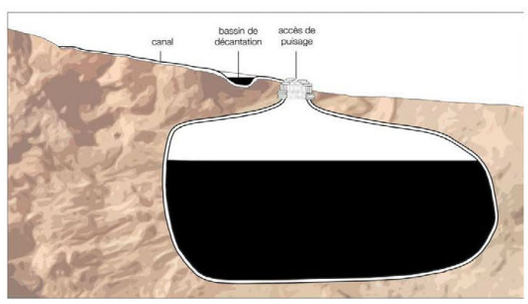
UNESCO 아르간, 아르간 나무와 관련된 풍습 및 기술(2014)

FAO 세계중요농업유산(2018)

Argan 기반 농·임·목축 세계중요농업유산

아르간과 연계된 베르베르 공동체의 전통 지식시스템

Terraces of crops



Matifiya

Igoudar

모로코 아르간 GIAHS

아르간 GIAHS의 경제·산업적 부문

구 분	기준연도(2012)	달성연도(2019)	진행률(%)
아르간 오일 생산량(톤)	2,470	5,640	128
매출액(백만 디르함)	347	1,139	228
수출액(백만 디르함)	94	273	190
고용(명)	6,000	12,000	100
아르간 오일 수출량(톤)	871	1,348	54
부가가치액(백만 디르함)	273	797	192

<Argan oil Market size>, source: Fellahtrade(2023)

경제·산업분야 문제점

1.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으로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지 못함
2. 아르간 숲 면적 확대를 위한 **육종 활성화 부족**
3. 아르간 제품에 대한 다양한 인증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
4. 소규모 협동조합과 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제품 경쟁력** 부재
5. 아르간 숲 생태관광과 지역 특산품과 연계성 미비

모로코 아르간 GIAHS

아르간 GIAHS의 사회·문화적 부문

사회·문화 분야 특징

- 아르간 나무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은 이 지역 베르베르인 여성들에게 아르간 오일의 전통적 생산과 고유한 지식으로 계승됨
- 라바트 모하메드 V세 Zoubida Charrouf 교수는 아르간의 효용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르간 오일 협동조합 'Amal' 설립
- 협동조합은 농촌 지역 여성들의 **소득증대, 문해력 향상, 오일 제조에 대한 전통지식 계승**을 통한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 아르간 생태계 보전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회·문화분야 문제점

1. 여성협동조합의 **재정적 자립** 필요
2. 아르간 오일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지역 소비 감소
   - 아르간 오일은 베르베르 공동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또한 그들의 집단 기억을 통한 정체성 형성에 필요한 매개물임

모로코 아르간 GIAHS

아르간 GIAHS의 생태·환경 부문

생태·환경 분야 특징

- 아르간 나무(*Argania Spinosa (L) Skeels*)는 신생대 제3기 유물로 매우 건조한 모로코 남부에서만 자생하는 독특한 수종
- 아르간 나무는 연료, 사료, 식용기름 등 다용도로 활용되며 이 지역의 300만명의 생계 수단임
- 아르간 나무는 사막과 같은 생태 조건에 매우 강해 지역의 지하수 유출방지, 바람에 의한 토양 침식과 유실 방어, 탄소 저장 및 관리, 유전적 다양성 보전, 미기후 조절 등 **다양한 생태계 활동**을 하고 있음
- 아르간 생물권보존지역은 아르간 생태계를 중심으로 **생물 다양성의 보고**임

생태·환경분야 문제점

1. 매년 600ha의 **아르간 숲 소실**
   - 숯 생산, 무차별 벌채, 과도한 방목과 사료 채취 등으로 황폐화되고 있음
2. 수출 작목의 집약 농업 경작지 확대
   - 또한 최근에는 인구증가와 도시화 및 인프라 개발로 인한 아르간 숲 면적 감소

아르간 GIAHS의 ODA 연계 가치 창출(안)

Chapter 3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익

선진 공여국 ODA지원 정책 변화

- **ODA연계 국익추구 적극 표현**
  - 2010년 들어서면서 주요 공여국들은 자국의 ODA정책문서 또는 공식 담화에서 원조를 통해 국익을 추구할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국 기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임
  - 공여국들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채택하여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개발가치도 지향하는 반면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국익 실현**에 기여하는 대외 정책 추진
  - 미국: 자국의 안보와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ODA 적극 활용
  - 일본: '열린 국익'이라는 새로운 국익 개념을 통해 경제적 실익 추구의 수단으로 ODA 이용

한국 ODA지원 정책과 국익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2021~2025) ODA관련하여 국익 명시**
  - 한국 역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 활동을 위한 양자 ODA 원조 규모 확대
  - 개도국의 투자 무역 시스템 및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개도국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계획을 반영하고 있음

공적개발원조(ODA)와 비즈니스 연계 필요성

- **ODA는 외교 및 비즈니스 중요수단**
  - 자원 빈국인 한국은 개도국 지원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함
  - 경제협력강화, 수출확대, 신흥시장 개척 등을 위한 ODA활용은 국가 안보와 국가 생존에 직결되고 있음
  - 개발협력사업은 국제사회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국가적 비즈니스이며, 이는 개도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통한 **수출기반 및 지지기반 확대**로 나타남
  - ODA연계 교육을 통해 배출된 해외 유학생, 연수생들은 각국의 지도적 인사로 성장할 경우, 친한파로서 한국 입장과 비즈니스를 대변함
  - 관련 연구에 의하면 공적개발원조는 국익의 해외 유출이 아닌 75%가 일차적으로 공여국 국내 경제에 귀속, 환류되어 **지속적인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음

국제협력사업은 함께 사는 지혜를 자원으로 '공동 이익'를 생산하는 미래산업

KOICA ODA연계 비즈니스 프로그램

KOICA ODA연계 비즈니스 프로그램

INCLUSIVE BUSINESS SOLUTION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당면한 사회 개발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고용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업**
  - 대기업, 중견기업(수시발굴형),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공모형)
  - 파트너 기관 단독 혹은 컨소시엄 구성 사업수행
  - 연간 5억원과 매칭 펀드(자산규모별 비율 다름)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

- **성공사례**
  - 전자 상거래를 통한 농업 비즈니스(방글라데시)
  - 망그로브 숲 친환경 수산양식 사업(필리핀) 등

ODA연계 비즈니스 개발협력 방안(아르간 GIAHS)

아르간 ODA연계 비즈니스 사업 환경

1. 아르간 나무 생산성 분야

- 아르간 나무는 수 백년 동안 베르베르인이 건축용 목재, 가축사료 및 식용유로 사용하여 왔으며, 오늘날 아르간 오일은 웰빙 트렌드와 함께 식품, 화장품용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아르간 오일은 모로코 정부의 수출전략 품목으로 **한국의 기술 및 마케팅이 전수**되어 협력관계가 구축된다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KOTRA)
- 재배 기술 측면에서 아르간 나무는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육종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며, Souss Massa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아르간 나무의 유전자를 분류하여 기후 환경에 적합한 토양에 이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육종기술은 발달하였지만 노지 토양에 이식한 후, 거의 대부분의 **아르간 나무가 고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빠른 대책 필요함

2. 아르간 마케팅·유통 분야

- 모로코의 수출시장은 대부분 EU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토마토같은 경우에는 수출비용의 30%가 물류비용으로 스페인, 터키와 같은 주변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임

ODA연계 비즈니스 개발협력 방안(아르간 GIAHS)

아르간 ODA연계 비즈니스 사업 환경

2. 아르간 마케팅·유통 분야

- 마케팅부분에 있어 모로코는 유럽국가의 수요, 다양성, 품질 등의 조건에만 맞추는 생산 시스템만을 고집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방안 수립돼야 하며 팬데믹 시대에 알맞은 **온라인/모바일 마케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3. 정책 및 교육 분야

- 모로코 농업정책은 열악한 편으로 농업 프로젝트 자금 조달 프로젝트 참여율이 전무하여 혜택을 보는 농민은 18%밖에 되지 않음
- 모로코 농업부문의 관련 조직이 체계화되지 않아 농민과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는 편이고, 부적절한 경영 구조를 가진 농장이라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함
- 모로코 농업 전문분야 교육은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의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 또한 스마트팜 농장이 많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농 중심의 단순 원료 생산 이외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술 및 마케팅 교육이 부족하고, 고학력 실업자도 많은 편임
- **아르간 나무 육종과 연계한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 구축과 이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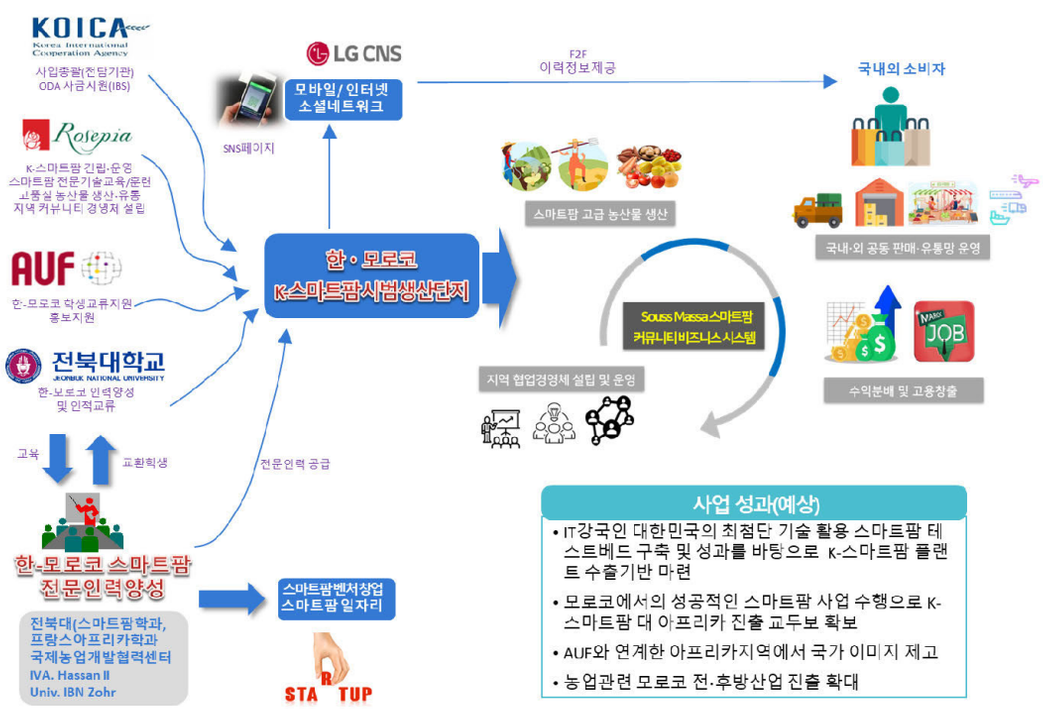
아르간 GIAHS의 ODA연계 비즈니스 사업(IBS구상안)

모로코 k-스마트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장 플랫폼 구축

목표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 및 정착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농촌 개발 지원
추진전략	K-스마트팜 시범생산단지 조성	지역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스마트 농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본사업	세부사업
K-스마트팜 시범생산단지 건립	1. k-스마트팜 혁신밸리 건립·운영(테스트베드)
	2. 지역 커뮤니티 경영체 육성 시스템 구축
고급 농산물 생산 및 유통	3. 고급 농산물 R&D 및 생산
	4. ICT활용 국내외 마케팅·유통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	5. 현지 스마트팜 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6. 산·학연계형 스마트팜 전문석사과정 운영
사업운영	7. 한-모로코 공동 추진단 운영

아르간 GIAHS의 ODA연계 비즈니스 사업 구성도(IBS구상안)




감사합니다

UAE and the Regional Strategic Transformation

John Harrison (Rabdan Academy)

3세션. 중동과 아프리카의 신흥안보

Session 3. Addressing Emerging Security Challenges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

[좌장 Chair]
김수원 (한국외국어대학교)
Kim Suwe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아랍의 봄 이후의 중동발 이주와 수용국의 정치 안정성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post-Arab Spring Migration to Political Stability of the Host Country
  백승훈 & 노다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Seunghoon Paik & Dasol Roh (IMES, HUFS, Korea)
- 레바논 국가 안보 위협으로서의 시리아 난민
  Syrian Refugees as a National Security Threat to Lebanon
  이경수 & 안소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Kyungsoo Lee & Soyeon Ahn (IMES, HUFS, Korea)
- 정책통합이론으로 분석한 서아프리카 기후변화대응
  West African Response to Climate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Integration
  김유원 (한국외국어대학교)
  Yoowon Kim (HUFS, Korea)
- Strong states, stronger societies. Middle East cases and the refugee crisis
  Marwa Mohamed (Rabdan Academy)

아랍의 봄 이후의 중동발 이주와 수용국의 정치 안정성 연구

백승훈 & 노다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아랍의 봄 이후의 중동발 이주, 대중영합주의 그리고 수용국의 정치 안정성

백 승 훈, 노다솔

◁ 목 차 ▷

** 00 대학교 00학과 교수

I. 서론

아랍의 봄이 추동한 중동발 대규모 민족 이산은 아랍의 시민 봉기가 발발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주민을 발생시킨 유출국은 물론 이들을 수용하는 유럽, 동아시아, 북미 지역 국가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동발 집단 이주민을 유출한 이집트, 튀니지,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은 유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들을 수용한 국가에서는 이슬람 혐오 및 이주민에 대한 반감 등 사회 갈등과 반목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랍의 봄 이후의 중동발 이주가 수용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더 나아가 그 영향력이 어떤 이유와 사실에 근거하여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실증 연구(empirical research)가 필요하다.

2011년 중동 전역에서 발발 한 아랍 시민 봉기는 역내 국가에서 만성화된 권위주의 체제와 경제 개발에 걸림돌이었던 정부 주도 경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발신했다. 국제 사회 역시 '아랍의 봄'이라는 수사를 통해 중동에서 벌어진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랍의 봄과 이 사건이 추동할 변화에 대한 기대는 얼마지 나지 않아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다. 아랍 시민 봉기가 일부 국가에서 장기 집권하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권위주의 체제 자체는 공공화되었고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는 행위 주체만 변화한 채 더 강력한 소수 기득권층의 지대추구 체제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백승훈 2021). 아랍 시민 봉기는 시리아, 예멘, 그리고 리비아에서 내전을 초래하였으며, 시민 봉기 초기 30년 장기 독재의 무바라크(Hosni Mubarak) 정부를 무너뜨리며 많은 기대감을 심어주었던 이집트에서는 나세르 이후 최초로 정부의 개입 없는 선거로 선출된 모하메드 무르시(Mohamed Morsi)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퇴출당하였다. 역내 여러 국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튀니지는 시민 봉기의 후폭풍 속에서도 민주적 전환을 이루어 진정한 '아랍의 봄'의 사례가 될 듯 보였으나, 2019년 대통령이 된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가 2022년 7월 개헌을 단행하며 권위주의 정권의 서막을 알렸다. 새로운 튀니지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내각 인사의 경우 의회의 신임

투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화국의 주요 요체는 삼권 분립임에도 대통령의 판사 임명권까지 부여한 개헌안은 아랍의 봄 이후 2014년에 개정된 의원 내각제의 튀니지 정치 체제를 완전히 뒤엎은 것이었다. 아랍의 봄 발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중동·북아프리카 지역(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의 평화, 안정 그리고 민주적 체제 변화는 여전히 요원하다.

역내 각국의 체제 불안정성은 중동발 이주민 또는 유민들이 지속해 유출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아랍의 봄 이후의 중동발 이산은 전 세계적으로 이민에 대한 반대(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반대)와 극우파 정당의 도래 등 역외에도 여러 영향을 끼쳤다. 2017년 "유럽 연합의 이민자 사회 통합" 란 주제로 특별 편성하여 출간한 유로바로미터 469호에 따르면 유럽인의 38%가 유럽 연합 외부에서의 이민은 이들을 수용하는 유럽 회원국에게 기회보다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Eurobarometer 2017). 유로바로미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국에게는 기회이다'라 생각하는 비율이다. 이주민 유입이 수용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유럽인의 비율은 8%에 불가했다(Eurobarometer 2017). 특히 아랍의 봄 이후 중동발 이주민이 가장 많이 정착했던 독일에서 2%의 국민 만이 이주민의 자국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는 많은 함의점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1년 이후 지속되는 MENA 국가의 체제 불안정성으로 중동발 집단이주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받아들이는 수용국의 이주민 인식과 상황을 고찰한다. 특히 이주 문제에 대한 대중영합주의와 안보 의제화를 조망하고 패널 자료를 활용한 계량 기법을 통해 실제 이주민이 수용국의 정치제체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한다. 실증 모형과 분석을 통해 이주가 수용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실제 이주민 정책 입안에 활용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Ⅱ. 이론틀 및 연구 방법

1. 대중영합주의(populism)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이후 민주주의 정부의 본령으로 회자하는 구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주의가 대중영합주의(populism)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체제 혹은 민주주의 체제의 주요 행위자-정부, 정당, 시민단체 등등- 들이 대중영합주의의 위험성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대중영합주의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행동이라는 정당성을 부여받아 타자에 대한 배제와 심각할 경우에는 폭력까지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대중영합주의는 크게 4개의 요소로 1) 국민/시민/인민 2) 도덕적 정당성 3) 투쟁 4) 기득권, 구성된다. 대부분의 대중영합주의 운동은 자신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평범한 국민, 소시민이 억압받고 있고 이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긴다. 이 과정에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기득권이 존재하며, 이들을 타파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를 견지한다(Arato & Cohen 2017, 286; Bonikowski & Gidron 2016; Norris & Inglehart 2016, 18).

대중영합주의는 또한 4가지 주된 특성을 띠게 되는데 1) 동질성 2) 배타성 3) 직접 민주의 4) 민족주의가 그것이다. 대중영합주의는 동질성을 강조한다. 이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로 가기 위한 첫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국민/인민/시민에 대한 통일성과 동질성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일상인 의견 충돌, 다양한 이해관계, 협의, 타협의 필요성을 약화한다. 국민/인민/시민의 범주화에 있어 동질화 과정은 사람과 사람을 내 범주, 외 범주로 분류하게 하며 동질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내 범주를 더 선호하게 만든다. 국민/인민/시민의 개념을 범주화하는 과정은 그 범주 내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타자화되는 외 범주 대상에 대한 배타성 강화 더 나아가 그들에 대한 투쟁 혹은 대항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 과정에서 동질화된 내 범주 집단인 국민/인민/시민은 선량하고 균일한 존재가 되며 이에 반하는 세력과 대립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옳다는 신념이 된다. 특히 내 범주 집단과 외 범주 집단의 대립에 도덕률과 가치판단의 위계를 부여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 대중영합주의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

다. 모순적이지만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담론이 제어 없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오히려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자연스러운 대립, 다양한 의견은 무시되고 동질성에 벗어난 사람 혹은 세력은 배제된다.

우리는 아랍의 봄 이후 대중영합주의 극우 정당들이 어떻게 자국민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이슬람 혐오, 반 이주민 정서를 극대화하여 국민의 지지를 결집하고 지지를 얻었는지 경험했다. 르 펜(Marine Le Pen)이 이끄는 프랑스의 국민전선(National Front in France, NFF), 독일의 대안통합당(Alternative for Germany, AfD), 오스트리아의 자유당(Freedom Party of Austria, FPO) 및 영국의 영국독립당(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 UKIP)과 같은 극우 정당들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이야기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이 정당들은 이민 문제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이용하여 이민이 국가 정체성, 자국의 문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이란 담론이 공론의 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도 대중영합주의의 4요소는 적절히 활용되었다. 국민의 경계 밖에 있는 이주민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존재이며 이주민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기득권, 정치, 경제, 사회 엘리트 계층에 대한 투쟁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즉, 소위 기득권 세력이 규정하는 이주민들의 수용에 관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동질한' 국민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다는 가치판단까지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체적으로 대중영합주의가 받아들이는 반이주 정서를 실제에 의거한 위협인식인지를 분석한다.

2. 안보의제화(securitization)와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세계화와 다양한 사회경제적, 개인적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 벌어지는 이주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특히 이주민들의 주요 수용국, 이산의 종착지로서 유럽은 오래전부터 각광 받았다. 이에 따라 이주민들의 수용 정책은 EU는 물론 유럽 국가의 중요한 정치의제 중 하나이며, 이주민의 수용 관련한 여러 논의가 몇십 년째 이어져왔다. 반 몰과 디 박은 현대의 이주를 세 기간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는다((Van Mol & De Valk, 2016). 첫 번째 기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3년부터

1974년 사이의 석유 위기까지로 "파견 근로자 기간"으로 규정하였고, 두 번째 기간은 석유 위기에서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 1980년대 말까지이다. 마지막 세 번째 기간은 철의 장막, 냉전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이다. 이들은 유럽으로의 이주가 각 기간을 거쳐 증가함에 따라 이주나 이주민들에 대한 수용국의 태도도 변화하였다 주장하였다. 2차세계 대전 이후부터 석유파동의 기간 동안은 국제 이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있었으며, 타지역으로부터의 이주민 유입이 원주민과 수용국가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여겨졌다(Bonifazi, 2008). 그러나 냉전 이후의 시기 특히 아랍의 봄 이후에는 해당국의 경제 위기와 맞물려 "특정 이주민 그룹에 대한 적대감, 인종주의 및 외국인혐오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였다(Van Mol & De Valk, 2016, p. 35).

위에서 언급한 이주 기간을 살펴보면, 이주민이나 이주 자체에 대한 수용국의 태도에 명확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20세기 후반부터 여러 유럽국의 정부들과 EU 전체가 이주민 수용 통합 정책에 집중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유럽 전역에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집단위협이론(group threat theory)에 집중되고 있다. 이 이론은 실제적인 위협과 상징적인 위협을 구분한다. 집단위협이론에 기반한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적인 위협은 실업자나 교육 수준이 낮은 취약한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나며, 반면에 상징적인 위협은 강한 종교적 신념이나 국가주의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Schmuck & Matthes, 2017). 또한, 수용국 원주민의 종교적 소속과 소속감 정도가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Knoll 2009).

특히 최근 20년간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민들과 경쟁하며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 자원을 놓고 이주민과 경쟁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이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Bridges & Mateut, 2014; Davidov & Meuleman, 2012).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수용국 원주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경제적 위축과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선행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Vogt Isaksen 2019).

한국 역시 아랍의 봄 이후 중동발 이주를 처음 접한 한국 역시 그 대응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은 2018년 약 500명의 예멘 난민들이 제주 특별자치도의 무비자 입국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국하면서 처음으로 집단 이주를 경험하였다. 당시 폭발적인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8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제주도 무사증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실제로 제주도 입국 절차가 엄격해졌다. 당시 예멘 난민 입국이 인권보호 차원 보다는 자국민 보호 우선이라는 안보 측면에서 다루어진 실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동발 집단이주가 실제 수용국의 정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수용국의 이주정책 수립과정에서 대중영합주의와 맞물려 벌어지는 이주 의제의 안보화와 위협인식이 실제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Ⅲ. 실증 분석 방법론

1. 실증모형 및 분석 도구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아랍의 봄 이후 난민 유입의 증가가 난민 유입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133개 국가의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 식을 설정하였다.

$$PS_{ij} = a_0 + a_1 \ln(Refugee_{ij}) + a_2 \ln(GDP_{ij}) + a_3 \ln(\mathrm{Pr}ice_{ij}) + a_4 \ln(Trade_{ij}) + a_5 Dem_{ij} + a_6 Gini_{ij} + a_7 ED_{ij} + \varepsilon_{i,t}$$

해당 식에서 PS는 본 고의 종속변수인 정치적 안정성을 의미하며 $Refugee$는 독립변수로서 유입 난민의 누적 수를 뜻한다. 나머지 변수들은 해당 회귀

모형의 통제변수로 GDP는 소득 수준, *Price*는 경기 안정성, *Trade*는 경제 개방도를 뜻한다. 위 세 가지 통제변수는 공통으로 경제적 요인이 정치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모형에 포함되었다. 나머지 세 가지 통제변수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정치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되었는데, 구체적으로 *Dem* 민주주의 정도, *Gini*는 소득 불평등의 정도, 마지막으로 *ED*는 민족 분할 정도를 의미한다. a_0와 ε는 각각 상수항과 오차항(error term)을 의미하며, 아래 첨자 *i*와 *t*는 각각 국가와 연도를 나타낸다.

본 회귀분석은 현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133개국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행한다. 단, 해당 패널데이터는 변수별 이용 불가한 데이터들로 인해 불균형 패널 데이터(Unbalanced panel data)이며 특히 변수 *ED*의 경우 현재 수집 가능한 데이터의 누락(missing data)으로 인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데이터로 한정한다. 사용된 회귀모형은 합동 최소자승모형(Pooled OLS: 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고정효과모형(FEM: Fixed Effect Model), 그리고 확률효과모형(REM: Random Effect Model)이며, 본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Gretl*이다.

2. 변수 및 데이터

먼저 *PS*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난민 유입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의미하는데 해당 변수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로는 세계은행 산하 세계발전지표(WDI: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제공하는 정치 안정성 및 폭력과 테러의 부재(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Estimate) 지수를 사용하였다. 해당 지표의 정의에 따르면, 본 지표는 정치적 안정성 및 테러를 포함한 정치적 동기로 인한 폭력의 인식 정도를 나타내며 구체적인 측정범위는 대략 -2.5(정치적 안정성이 낮음)와 2.5(정치적 안정성이 높음)이다(World Bank 2023d).[2)]

2) 세계은행 산하 WDI(2023)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정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대략적으로 -2.5에서 +2.5 사이에 값을 가진다고 되어있지만, 실제 데이터의 범위는 최솟값 -

*Refugee*는 본 연구이 독립변수로 2010년 아랍의 봄 이후부터 2021년까지 누적된 유입 난민의 수를 뜻하며 분석의 편의를 위해 로그 변환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에서 제공하는 누적 난민 수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이때 2010년 이후 난민의 발생이 특히 급증한 시리아, 이라크, 예멘의 난민으로 한정하였다.

난민의 유입이 난민 수용국의 정치적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의 문헌들을 보면, 대다수 문헌에서는 양 변수의 상관관계가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Choi and Salehyan(2013)은 1970년부터 2007년까지 154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시행한 결과 난민의 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대·내외적인 테러 발생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난민의 유입은 경쟁 세력 제거를 위한 외부 세력의 유입, 난민이 맞닥뜨리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폭력적 활동의 증가, 마지막으로 수용국의 반난민 세력으로부터의 차별에 따른 공격성의 증가로 인해 정치적 불안전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Salehyan(2006)은 특히 내전으로 인한 난민이 인접한 국가로 피난을 갈 경우, 난민 수용국의 정치적 안전성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내전을 난민을 통해 확산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Gebremedhin and Mavisakalyan(2013) 역시 78개국의 횡단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주민의 증가는 수용국의 정치적 안전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방지출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본 회귀모형에서는 난민의 유입이 유입국 정치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실증 분석을 시행한 문헌을 토대로 각각 세 가지의 경제적 변수와 사회·문화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먼저 경제적 통제변수 중 첫 번째는 국가의 소득 수준으로 난민 수용국의 소득 수준이 정치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본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며 세계은행 산하 WDI에서 제공하는 1인당 실질 GDP를 사용하였

3.13 그리고 최댓값 1.69 사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 참고).

다. Bayat 외(2018)는 소련 해체 이후 전환 국가(transition economies)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정치적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1인당 GDP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Azeng and Yogo(2012)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24개의 개발도상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청년실업률과 정치적 안정성 간 정비례의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실업률과 1인당 GDP 간 반비례 관계를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해당 통제변수의 회귀계수 부호는 양이다.

두 번째 통제변수는 경기 안정성인데, 통상적으로 총수요변동에 따른 경기변동은 물가의 등락을 동반하기에 본 변수의 대리 변수는 물가상승률로 설정하였다.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낮은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정부에 대한 국가 구성원들의 신뢰도가 그만큼 강화될 수 있으므로 정치적인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TianQi Xu 2011, 15). Xu(2011)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63국의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이 정치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추정 결과에 따르면 인근 국가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높을 경우 정치적 불안정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헌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예상되는 물가상승률과 정치적 안정성의 관계는 정비례이다.

마지막 경제적 변수는 국가의 경제 개방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별 경제 개방도가 정치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무역액(수출액 + 수입액)을 측정 지표로 삼았다. 단, 해당 변수의 목적은 단순히 무역 규모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별 경제 개방도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무역액이 아닌 국가별 GDP 대비 무역액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때 해당 변수는 세계은행의 WDI에서 취합하였다. 경제 개방도가 정치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견해는 다소 불명확하다. 자유주의 모형(The Liberal Model)에서는 국가의 개방도가 높을수록 경제 발전의 수준이 높고, 따라서 국가가 더욱 안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Hegre 외 2003, 2). 반면 구조주의 모형(The Structuralist Model)에서는 높은 수준의 국가 개방도는 높은 수준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정치적 불안전성은 오히려 악화된다고 주장한다(전게서, 4). Alshammari and Willoughby(2019)는 1991년부터 2014년까지

19개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국가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역 개방도와 정치적 불안정성 간에는 유의하게 역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경제 개방도와 정치적 안정선 간 예상되는 회귀계수 부호는 양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회귀모형에는 정치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변수 외에도 총 세 가지 사회·문화적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 정도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WDI에서 추정한 시민의 발언권과 책임(Voice and Accountability) 지수 데이터를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다. 해당 지수는 언론의 자유, 단체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정도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시민이 그들의 정부를 선택할 때 참여 가능성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인식을 측정하며 그 범위는 대략 -2.5(참여 가능성 낮음)에서 +2.5(참여 가능성 높음) 사이이다(World Bank 2023f). 민주주의 정도와 정치적 안정성 간 관계에 대해 Rummel(1995 ; 1997)는 권위적 정부를 가진 국가와 비교하여 민주적 정부를 가진 국가는 갈등이 발생하였을 시 투표, 협상, 절충 및 타협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성과 폭력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가 국가 내 총체적인 비폭력 방지의 최고의 수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Al-Shammari and Willoughby(2019)가 1991년부터 2014년까지 MENA 지역 내 19개의 국가를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국가일수록 정치적 불안정성이 평균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역시 민주주의 정도와 정치적 안정성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사회·문화적 통제변수는 국가 내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정치적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WDI에서 제공하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다. 국가 내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높을 경우 소득의 분배가 낮은 그룹은 정부를 향해 보다 공정한 소득분배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요구가 심화되면 국가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Oualy 2021, 49). Alesina and Perotti(1996)는 1960년부터 1985년까지 전 세계 70개국의 패널데이터를 실증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유의하게

국가의 불안전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Oualy(2021)가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47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 불평등과 국가의 사회·정치적 불안전성 간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실증 문헌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정치적 안전성을 악화시킨다고 가정한다.

마지막 통제변수는 민족적 분할의 정도로 본 연구에서는 Dražanová(2020)가 제시한 역사적 민족적 분할 지수(HIEF: Historical Index of Ethnic Fractionalization)를 사용하였다. 해당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한 국가의 민족적 분할의 정도가 낮음을,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한 국가의 민족적 분할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전게서, 1). 한 국가 내 민족 구성의 분할 정도와 정치적 안정성 간 관계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돼왔다. 주된 의견은 민족의 분할 정도가 높을수록 각 민족이 서로 경쟁적으로 지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Easterly 1997, 12), 특히 권력에서 소외된 민족집단에 대해 국가가 차별적인 정책을 펼칠 경우 정치적 불안정성은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Goldstone 외 2010, 201; Khan 외 2021, 428). Blanco and Grier(2009)는 1971년부터 2000년까지 남미 18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민족의 분할 정도가 높을 경우 정치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헌을 따라 본 연구에서도 민족의 분할정도와 정치적 안전성 간 관계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표 1]부터 [표 3]까지는 변수 설명 및 기초 통계를 요약한 표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단위가 지수인 변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는 자연로그로 변환하였다. 이때, 변수 *Price*는 데이터값이 음수가 존재함으로 크기 조정(Scaling) 작업 후 자연로그로 전환하였다. [표 3]은 변수 간 가지는 상관관계의 정도, 즉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제시한 상관계수 행렬(Coefficient Matrix)이다. 통상적으로 상관계수가 0.8 이상이면 변수 간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하는데(박용규 2001, 44), 본 연구의 상관계수 행렬에서는 특별한 다중공선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분산팽창지수(VIF: Varience Inflation Factor) 역시 모든 변수가 5 미만 값을

기록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Housman Test)을 실시하였고, 검정 결과 P-Value 값이 귀무가설의 기각 역이 아닌 채택 역에 속하였다. 따라서 본 실증 분석은 고정효과모형 보다는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표 4]는 본 연구에서 관찰한 관찰 국가를 지역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 1] 변수 설명 및 데이터 출처

변수	표기	데이터, 단위(변형)	데이터 출처
정치적 안전성	*PS*	정치적 안전성 및 폭력과 테러의 부재 지수, 대략 -2.5~+2.5	세계은행(2023a), WDI
유입 난민 수	ln(*Refugee*)	시리아, 이라크, 예멘 발 누적 유입 난민 수, 명(ln)	UNHCR(2023)
소득 수준	ln(*GDP*)	1인당 실질 GDP, 2015 불변(ln)	세계은행(2023b), WDI
경기 안전성	ln(*Price*)	물가상승률, 소비자 물가 지수, %(ln)	세계은행(2023c), WDI
경제 개방도	ln(*Trade*)	GDP 대비 무역액, %(ln)	세계은행(2023d), WDI
민주주의 정도	*Dem*	시민의 발언권과 책임 지수, 대략 -2.5~+2.5	세계은행(2023e), WDI
소득 불평등 정도	*Gini*	지니계수, 0~100	세계은행(2023f), WDI
민족적 분할 정도	*ED*	역사적 민족적 분할 지수, 0~1	Dražanová(2020)

참고: ln은 자연로그 변환을 의미함.

[표 2] 기술통계

변수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PS	-0.18	-0.09	1.02	-3.13	1.69
ln(*Refugee*)	5.80	5.39	3.09	1.60	15.14
ln(*GDP*)	8.97	8.99	1.38	5.81	12.23
ln(*Price*)	2.05	1.98	0.49	0	5.96
ln(*Trade*)	4.30	4.31	0.62	-0.27	6.09
Dem	0.03	0.04	1.02	-2.19	1.75
Gini	35.24	34.30	7.09	23.20	63.40
ED	0.40	0.37	0.24	0.01	0.88

참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미만은 절사하였음.

[표 3] 상관계수 행렬

	PS	*ln(Refugee)*	*ln(GDP)*	*ln(Price)*	*ln(Trade)*	*Dem*	*Gini*	*ED*
PS	1.00	0.06	0.74	-0.44	0.43	-0.21	0.73	-0.40
ln(*Refugee*)		1.00	0.36	0.01	0.02	-0.28	0.17	-0.31
ln(*GDP*)			1.00	-0.36	0.33	-0.33	0.63	-0.31
ln(*Price*)				1.00	-0.41	0.15	-0.35	0.13
ln(*Trade*)					1.00	-0.12	0.26	-0.50
Dem						1.00	-0.24	-0.41
Gini							1.00	-0.29
ED								1.00

참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미만은 절사하였음.

[표 4] 관찰 국가 명단

지역분류	관찰 국가	계
아시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홍콩	18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4
북미	미국, 캐나다	2
중·남미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 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18
중동·북아프리카(MENA)	남수단,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튀르키예	21
아프리카(사하라 이남)	가나, 감비아, 기니,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셔스, 모리타니, 베냉, 부르키나파소,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자메이카, 잠비아, 지부티,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27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3
총계		133

Ⅳ. 결 론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벌어지고 있는 중동의 디아스포라 문제는 그 규모와 성격이 과거의 디아스포라와 다르다. 이주민 유출국가는 물론이고 역내외 수용국가 사회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발 민족 이산 문제에 대응하는 역내외 국가들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 이주민 및 난민들의 참혹한 상황을

공감하고 수용하는 방향보다 구별짓기 및 가려받기(extreme vetting)를 강화하고 있다. 중동발 난민 및 집단 이주 문제가 점차 수용국가에서 인권 차원보다 안보 의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중영합주의 정당의 세력화가 이슬람 공포를 이용하여 그 당위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이주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할 이주 및 난민 문제를 조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중동발 이주가 수용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했다.

본 연구는 아랍의 봄 직후인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33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면 난민 수용국의 이주민이 증가할수록 정치적 안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점을 준다. OECD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에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하는, 또한 노동인구의 부족으로 이주민 수용을 필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정책적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주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허구가 아닌 실제임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민 수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당위가 된 지금, 본 연구는 향후 이주민들의 유입에 따른 대중영합주의와 이주민 수용의 안보의제화를 대비하기 위한 선행연구 자료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레바논 국가 안보 위협으로서의 시리아 난민

이경수 & 안소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23 한국중동학회-한국아프리카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

레바논 국가 안보 위협으로서의 시리아 난민

2023.10.28

이경수, 안소연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과 강제 송환

- 레바논 정부에서는 2018년 5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리아 난민의 '자발적 귀환' 정책을 추진
- 2019년 4월에서 2021년 9월까지 약 6,345명의 시리아 난민이 귀환함
- 2022년 10월 1,600명의 시리아 난민 송환계획 재차 발표
- 공식 통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2023년 4월 이후 시리아 난민에 대한 레바논 정부의 급습 100건, 체포 2,200건, 추방 1,800건 이상으로 추측됨(HRW)
- 2023년 4월에서 5월 사이 수천 명이 넘는 시리아인들이 임의 체포되어 추방됨(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포함)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과 강제 송환

- 난민을 자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
- 송환된 시리아 난민은 정부에 의해 체포, 구금, 강제 징집, 고문 처형 등의 위험에 직면해 있음: 2017년-2021년 인근국에서 시리아로 귀환한 이들이 정부 혹은 정부와 연계된 민병대 세력에 의해 폭력적인 환경에서 인권유린 및 박해를 받았음 (HRW, 2021)
- 이러한 비인도주의적 정책은 국내에 체류 중인 시리아 난민의 존재를 국가의 안보 위협으로 여긴 결과: 정부와 민간

난민과 국가 안보의 위협

사회적 안보

- 전통적으로 군사에 국한된 안보화 개념이 탈냉전 이후 코펜하겐 학파에 의해 확장되며 정치, 군사, 경제, 사회, 환경 등 5개 분야로 구분됨 (Buzan, 1991)
- 사회적 안보: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조건 속에서 언어, 문화, 종교, 민족 정체성, 국가 관습 면에서 전통적인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는 능력"
- 사회적 안보에 대한 위협은 이주, 수평적 경쟁, 수직적 경쟁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서 발생하며 이주로 인한 위협은 인구 구성에 의한 변동으로 기존 사회에 위협을 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서의 난민 개념화

1. 특정 인종에 기반한 민족주의 정체성이 지배적인 국가의 경우, 국가를 구성하는 다수 인종이 아니거나, 수용국 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인종이거나,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인종의 유입이 사회적 위협의 존재로 형상화 됨

- 종파 혹은 종교적 정체성이 인종적 정체성을 대체하는 경우 '우리와 다른 종교, 종파 출신의 난민'의 유입이 인구 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난민이 사회적 위협의 존재로 형상화 될 수 있음

2. 강제적으로 이주해야 하는 난민의 경우, 수용국이 기본적인 생계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등 국가 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위협의 존재로 형상화 됨.

- 저숙련 노동의 경우, 자국 노동자들보다 낮은 인건비로 고용할 수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나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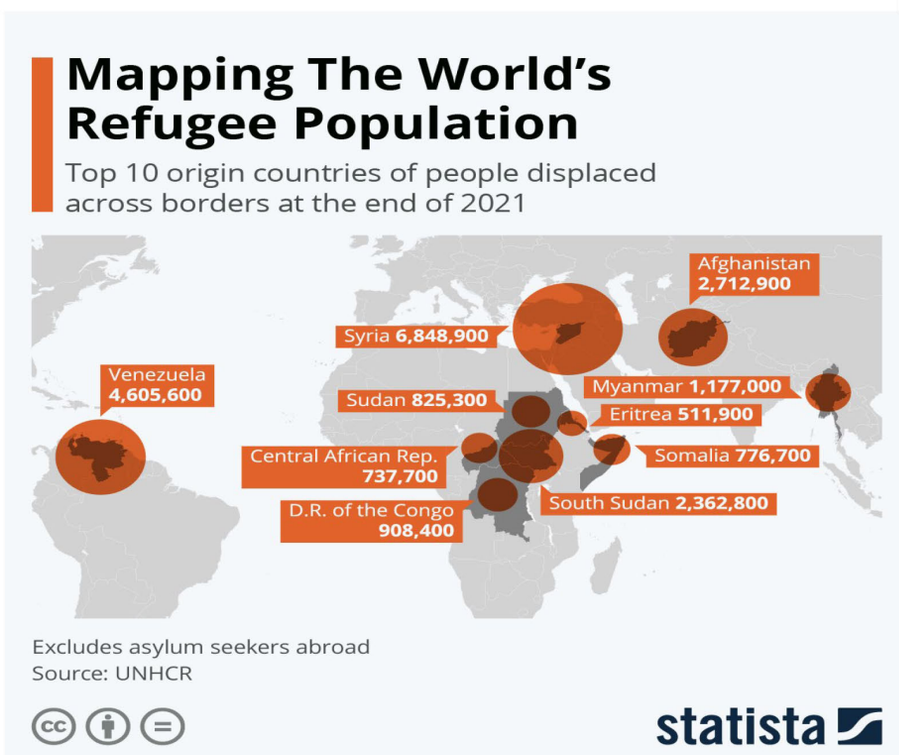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서의 난민 개념화

3. 외부 위협과 연계된 집단으로서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존재로 형상화 됨

- 특히 난민 배출국의 정치적 관계가 수용국과 대립적인 경우 국가에서는 난민을 외부에서 들어온 불청객으로 개념화 할 가능성이 있음.
- 반대로, 난민들이 수용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빈곤, 실업 등 극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 테러 단체 등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음

시리아 난민 발생과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세계 난민 발생 현황 (2021)



https://www.statista.com/chart/18436/total-number-of-refugees-by-origin-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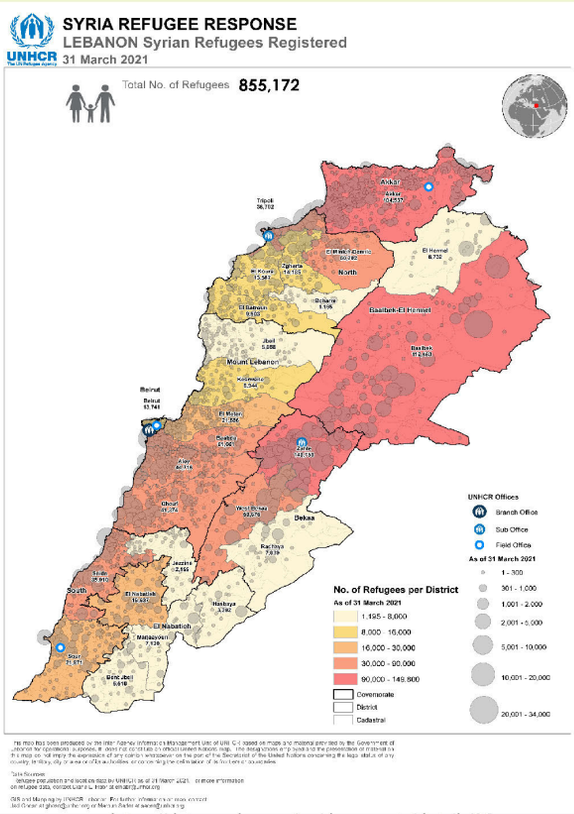
시리아 난민
분포 (2018)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18/01/29/where-displaced-syrians-have-resettled/ft_18-01-26_syriarefugees_map/

레바논내 시리아 난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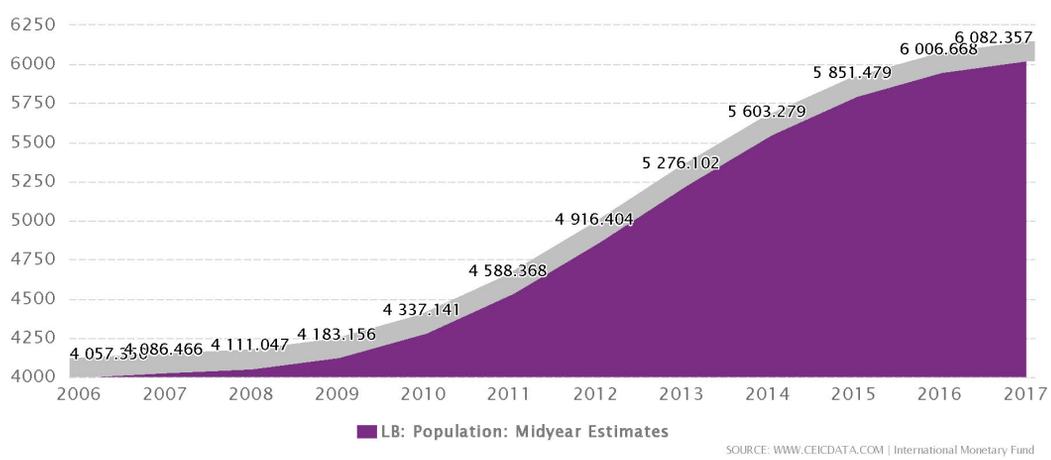
- 레바논은 주변국들에 비해 UNHCR에 등록된 국내 시리아 난민의 수가 두드러지게 많지 않으나, 인구대비 시리아 난민 숫자가 가장 많음(인구 1,000명당 시리아 난민 156명, 2018년 기준)
- 2011년 당시 약 450-500만 명이었던 레바논 인구는 6년간 2017년 약 600만명 이상으로 기록되며 단시간 가파른 상승률을 보임: 시리아 난민 유입의 결과: 약 150만 명의 난민이 레바논으로 유입
- UNHCR이나 국경에서 취합 가능한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인구 조사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움: 세계 기구의 통계 수치가 다양하고,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수의 시리아 난민이 유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UNHCR에 등록하지 않은 인구 포함)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분포(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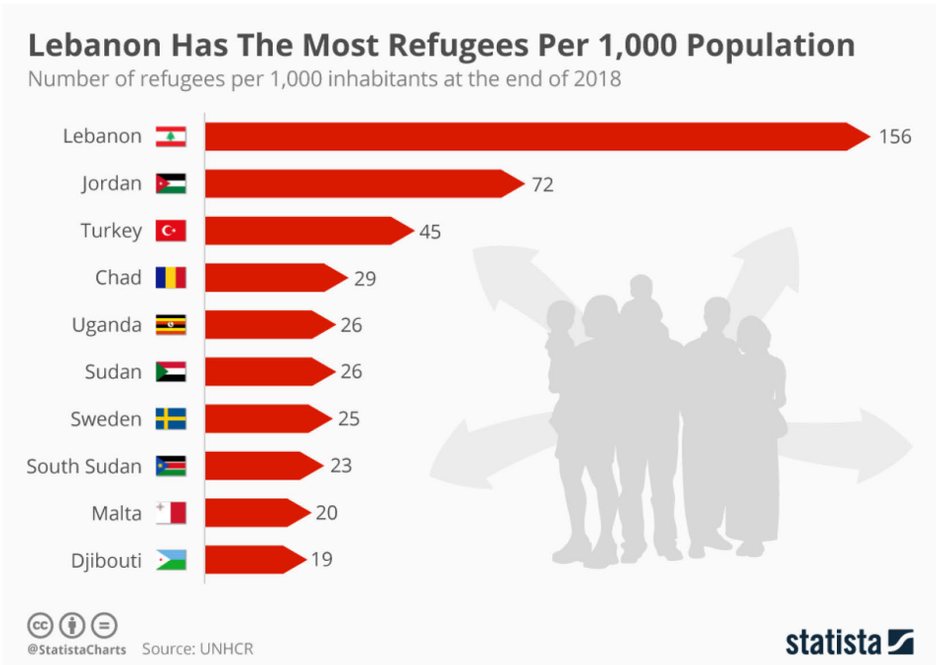
https://data2.unhcr.org/en/documents/details/86792

시리아 난민 유입으로 인한 레바논의 급격한 인구 변화 (2006-2017)



https://www.ceicdata.com/en/lebanon/population-annual

인구 1,000명 대비 난민 수



https://www.statista.com/chart/8800/lebanon-has-by-far-the-most-refugees-per-capita/

레바논내 시리아 난민 현황

- 레바논은 주변국들에 비해 UNHCR에 등록된 국내 시리아 난민의 수가 두드러지게 많지 않으나, 인구대비 시리아 난민 숫자가 가장 많음(인구 1,000명당 시리아 난민 156명, 2018년 기준)
- 2011년 당시 약 450-500만 명이었던 레바논 인구는 6년간 2017년 약 600만명 이상으로 기록되며 단시간 가파른 상승률을 보임: 시리아 난민 유입의 결과
- UNHCR이나 국경에서 취합 가능한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인구 조사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움: 세계 기구의 통계 수치가 다양하고,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수의 시리아 난민이 유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UNHCR에 등록하지 않은 인구 포함)

공동체 정체성 위협으로서의 시리아 난민

공동체 정체성 위협으로서의 시리아 난민

- 레바논의 경우 종파주의 사회로 인종, 종교, 민족 등을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 개념이 뿌리깊은 국가가 아님에도 타국가 민족이 난민으로 유입되는 경우 보수적이고 선택적 태도를 보임: 긴장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사회 보호의 수단
- 1948년 나크바로 유입된 팔레스타인 난민의 경우 종교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반된 대접을 받음: 기독교인과 부유한 일무 무슬림들의 경우 시민권을 부여받음

공동체 정체성 위협으로서의 시리아 난민

- 시리아 난민이 대거 유입될 당시 레바논 정부는 이들의 유입을 막지는 않으면서도 난민 캠프 마련을 포함한 난민 수용 정책을 수립하지 않음: 국가 내 혼란과 난민 유입이라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의도적 선택
- 정치 엘리트의 경우 각 종파의 성향을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시리아 난민을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외부인'으로 인식케 하는 발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침: 기독교 정파 지도자들은 팔레스타인 난민 유입의 역사를 인용하여 종파간 인구 균형 붕괴 및 내전의 두려움을 활용

경제적 위기의 원인인 시리아 난민

경제적 위기의 원인인 시리아 난민

- 레바논 국민도 식수, 전기, 자원 등 부족한 상황에서 난민들과 공공재를 공유하고 있다. (무스타파 바이람 노동부 장관)
- 난민들이 국가 보조금 혜택을 누리면서 레바논 정부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헥터 핫자르 사회부 장관)
- 오랜 내전, 종파주의로 인한 국내 정치 불안정, 부정부패 등 국가 지도층으로부터 야기된 경제위기를 외부에서 유입된 난민의 탓으로 돌림
- 오히려 난민 수용국이라는 명목으로 해외 원조를 받아 오히려 투자가 증가하여 경제 성장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 해외 원조를 지대 수익으로 사용하는 난민 지대 국가(refugee rentier states)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음

국가 안보 위협으로서의 시리아 난민

국가 안보 위협으로서의 시리아 난민

- 시리아와의 국경 경계선 전체에 출입국 감시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아르살 지역의 경우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시리아에서 넘어오는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의 주요 유입지점이 됨
- 헤즈볼라의 시리아 내전 개입으로 반정부 성향의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이 유입하여 헤즈볼라 밀집 지역 내 폭탄테러를 자행: 사회적 불안 긴장 확산
- 난민들과 함께 극단주의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초기 아무런 통제 없이 시리아인의 입국이 발생하면서 기독교계 정엘리트는 이를 이용하여 시리아 난민 전체를 위협적인 존재로 형상화

레바논내 시리아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

레바논내 시리아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

- 아사드 정권 복귀 이전까지 레바논 정부는 난민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으며 방치하여 국민들의 안보 불안 형성에 기여
- 정부 차원의 안보 부재로 지방 정권의 국가 안보가 확립: 시리아 난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통금, 취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 지방적 차원에서의 안보는 종교적 영향보다도 '단기간에 다수 유입된 외국인'에 대한 위협을 가장 크게 인식: 정부 엘리트의 선동은 결국 실질적 현황에 대한 타개책과는 거리가 멂

결론

감사합니다.

정책통합이론으로 분석한 서아프리카 기후변화대응

김유원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 KAAS-중동학회 공동학술회의

정책통합이론으로 분석한 서아프리카 기후변화대응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유원

1

목차

2

Part 1

환경정책통합이론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의 의미

- 환경분야와 그 정책 목표가 환경 이외의 정책 분야와 통합되는 것
  - 환경 문제의 포괄성을 배경으로 함
  - 효과적인 환경정책 실행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측면
  - 에너지, 농업, 교통, 산업 등 다분야를 망라함
  - 환경정책은 이러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동시에 포함해야 하는 것

- Policy Integration, Sector Integration, Climate Policy Integration 등 비슷한 용어들이 함께 사용됨

3

Part 1

환경정책통합이론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과 분석수준

- 수직적 통합 (상위-하위 정책 간의 통합) 및 수평적 통합(부문 간의 통합)
- 기존의 연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global-state"의 정책 통일성
  - central-regional government 간 정책통합
  - state 내에서 부처 간, 영역 간의 정책 일관성

- 환경/기후 문제의 cross-border 측면을 고려하여 새로운 분석 수준의 필요성
  - 아프리카에서 '지역region'은 정책 수립 및 실행의 중요한 행위자
  - 동아프리카지역의 경우 이미 climate change master plan을 발표한 바 있음

4

Part 2

ECOWAS의 기후대응 전략

The Revised Treaty (1993) | ECOWAS 환경정책 (2008) | ECREEE (2008)

- ECOWAS Regional Climate Strategy (2022)
  - ECOWAS 차원에서 세운 첫번째 지역 기후대응 전략
  - 지역 수준에서 다루어야 하는 이슈임을 뜻함
  - <파리협정> 등 글로벌 협정과의 연계 강조
  - 회원국 간 협력 및 참여를 독려

5

Part 2

ECOWAS의 기후대응 전략

- 세부 내용
  -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지역적 대응의 시급성과 중요성 강조

    지구온난화로 인한 강우량 변동성 증가
    지구온난화 가속이 예상되는 지역
    기온상승과 빨라지는 사막화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꾸준히 증가해 옴

Community that is resilient to the effects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that has managed to seize the associated economic opportunities in favour of long-term, low-carbon, sustainable development.

6

Part 3

전략에 대한 평가

- 수직적 통합 측면
  - <파리협정>과의 정책목표 정합성
  - AU Plan 및 ECOWAS Vision 2050과의 정합성
  - 회원국과의 정책 정합성

- 과제
  1) 지역적 관여에 대한 정당성 확보 및 지원 역량 제고
  2) 회원국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상황 조율

7

Table1. Sectors prioritised in the NDCs (2021) of Member States for mitigation[32]

Countries	Objectives			Sectoral reduction potential								
	Unconditional	Conditional	Global	Electricity production	Biomass	Tertiary	Residential	Industry	Transport	Agriculture	Forests and other land uses	Waste
Benin	√	√		√		√	√		√	√	√	√
Burkina Faso	√	√		√	√	√	√		√	√	√	√
Cape Verde	√	√		√		√	√		√		√	
Ivory Coast	√	√		√		√	√	√	√	√		√
Gambia	√	√		√	√	√	√	√	√	√	√	√
Ghana	√	√		√		√	√	√	√		√ Forestry	√
Guinea	√	√		√				√	√		√	√
Guinea-Bissau	√	√		√		√	√			√	√	√
Liberia	√	√		√			√	√	√	√	√ Forestry	√
Mali			√	√			√	√	√	√	√ Forestry	√
Niger				√		√	√		√	√	√	
Nigeria	√	√		√		√	√	√	√	√	√	√
Senegal	√	√		√	√	√	√	√	√	√	√ Forestry	√
Sierra Leone	√	√		√		√	√	√	√	√	√	√
Togo	√	√		√			√	√	√	√	√	√

Objective non specified

Identified mitigation actions but reduction potential not defined

8

Table 2. Sectors prioritised in the NDCs (2021) of Member States for adaptation[33]

Countries	Agriculture & livestock	Ocean, fisheries & coastal zones	Water & sanitation	Forestry	Health	Housing, infrastructure & construction	Biodiversity and environment	Energy	Transport	Spatial planning	Risk management	Tourism & trade	Waste
Benin	■	■	■	■	■							■	
Burkina Faso	■					■	■		■				
Cape Verde	■	■	■		■					■	■		
Ivory Coast	■	■	■	■	■								
Gambia	■	■		■		■						■	
Ghana	■			■		■					■		
Guinea Bissau	■	■	■					■					
Liberia	■	■		■	■			■	■				■
Mali	■		■	■			■	■	■	■			
Mauritania	■	■	■		■	■	■			■			
Niger	■			■		■		■	■				
Nigeria	■	■	■				■	■				■	
Guinea	■	■	■	■									
Senegal	■	■	■		■		■				■		
Sierra Leone	■					■	■						
Tchad	■	■	■	■	■	■	■	■		■	■	■	
Togo	■	■	■	■	■			■					
TOTAL	17	12	11	10	8	7	7	7	4	4	4	4	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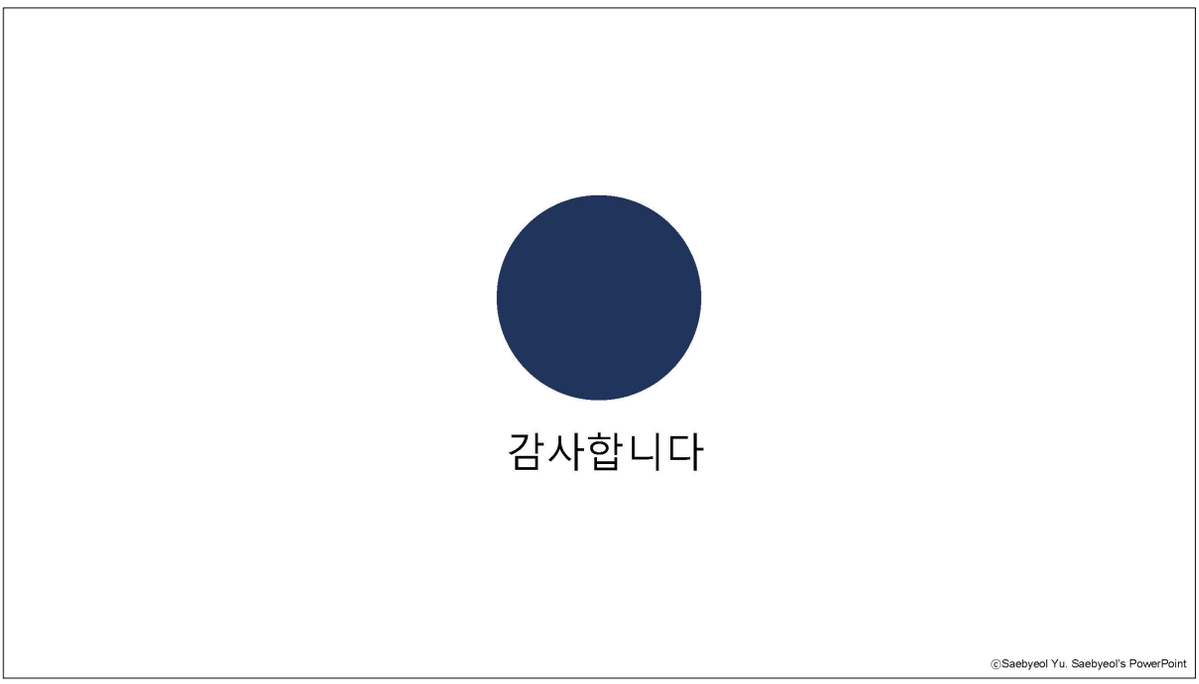
Part 3

전략에 대한 평가

- 수평적 통합 측면
  - 농업/에너지/교통/생물다양성/수자원/해안/보건/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기후전략
  - 기후 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이슈영역을 다룸으로써 정책 간 연계성 강화

- 과제
  1)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전략 목표
  2) 구체적인 실행전략의 부재
  3) 지역통합을 넘어선 지역주도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10


감사합니다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Strong states, stronger societies.
Middle East cases and the refugee crisis

Marwa Mohamed (Rabdan Academy)

4세션. (주한 UAE 대사관 특별 세션)

Special Session. Enhancing Cooperation Between the Middle East and East Asia Toward Multipolar World Order

---

[Chair]
Alanoud Al Hosani (TRENDS Research and Advisory)

- U.S.- China Tensions and Its Impact on Cooperation Between the Middle East and East Asia

  Mohamed Binhuwaidin (UAE University)

- Regional Organizations and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the Middle East and East Asia

  Abdelrahman Ahmed (Sharjah University)

-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Middle East and East Asia in Trade, Investment, Energy, and Security

  Mouza Al Marzouqi (TRENDS Research and Advisory)

U.S.- China Tensions and Its Impact on Cooperation Between the Middle East and East Asia

Mohamed Binhuwaidin (UAE University)

Regional Organizations and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the Middle East and East Asia

Abdelrahman Ahmed (Sharjah University)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Middle East and East Asia in Trade, Investment, Energy, and Security

Mouza Al Marzouqi (TRENDS Research and Advisory)